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경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족계획 생활을 하겠는고?”

- 인구담론과 한국의 가족계획사업, 1953~1972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황 민 영

“가족계획 생활을 하겠는가?”

- 인구담론과 한국의 가족계획사업, 1953~1972 -

오 경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황 민 영

인 준 서

황민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u> 홍 석 률 </u>	(서명  인)
심사위원	<u> 오 경 환 </u>	(서명  인)
심사위원	<u> 조 은 주 </u>	(서명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1953~72년 사이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인구 담론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한국에서의 인구 담론이 어떻게 가족 담론으로 변주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인구라는 개념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초래한 도시 문제와 얽히며 등장했다. 인구라는 새로운 인식의 격자는 그물망(network)과 같은 구조로 국가의 상부 단위로서의 사회와 하부 단위로서의 가정을 변화시켰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인구 담론이 초래하는 변화상을 잘 드러냈다. 우생학, 통계학, 의학 등의 학문이 보편화되었고, 특히 우생학은 근현대사의 계보에서 열전과 냉전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단초는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일국사적인 인구 담론의 지평을 세계 체제화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개념에 불과했던 인구는 18~20세기를 거치며 하나의 거대한 인구 지식 총체, 즉 인구 담론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을 촉발했다. 한국은 세계 체제화된 인구 정책의 흐름 속에서 가족 담론으로의 전환을 맞이했다. 이 전환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지가 바로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을 주도한 반관반민 기관인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등장이었다. 가족계획협회는 의료전문가, 행정관료, 사회공학자라는 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체였다. 이 조직체는 발전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건설과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주요 기치로 삼고,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이 선결되어야 함을 인지했다. 이를 위해 조사연구, 정책자문, 교육홍보 세 영역에서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활동들은 혼재된 상으로 존재하던 가족의 상을 하나의 모형으로 조립해냈다.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보편적인 가족의 원형(남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바로 이것이다. 이 가족 모형은 사적 공동체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적 공동체라는 속성이 부여되어 있었다.

공적 공동체로써의 가족 모형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교육홍보 사업을 통해 대중화되었는데, 특히 기관지였던 『가정의 벗』에 그 구체적인 실상이 제시되어있다. 편집진-필진-표지-광고-내지 각각에는 당대의 가족 모형이 담겨있다. 동 기관지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배부되었다는 사실은 가족계획협회의 가족 모형 대중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보편적인 가족의 상이 온존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그 작업의 성공을 시사한다.

핵심어: 인구 담론, 가족계획, 가족계획협회, 가정의 벗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인구담론의 형성과 전파	6
III. 가족담론으로의 전환과 대한가족계획협회	18
IV. 『가정의 벗』과 한국에서의 인구학적 실천	44
V. 결론	60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I. 서론

【워싱턴 이십구일발 AP】 미국무성의 인구문제연구보고는 후진국의 관민기관이 팽창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대적인 『산아제한정책』을 채택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예시하였다.¹⁾

최근 한국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대비에 치우쳐져 있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건대 화양초가 재학생 수 84명으로 폐교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홍일초(2015년), 염강초(2020년), 공진중(2020년)에 이은 벌써 4번째 폐교이다. 화양초의 폐교에는 인근 상권 재편이 크게 작용했지만 저출산 역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1990년대 이래로 계속 하강세를 그리며, 저출산 대책에 수십 조원을 쏟아붓는 상황에 직면했다.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20세기 중반 인구 정책의 기초는 가족계획사업이었다. 가족 계획사업은 1950~80년대 정부, 국외기관, 민간조직이 각 층위에서 한국의 인구 지형을 재편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산아제한은 이러한 사업 아래 행해진 여러 활동 중 하나였다.²⁾ 현재 0.7이라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성공의 이면에는 근대 이래로 발전해온 인구담론과 한국의 내외부에서 상보적인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투입으로 인한 균열이 공존해왔다. 가족계획으로 말미암은 균열의 과정은 남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 가족 모형을 정착시켰다. 이 모형은 현재까지도 한국의 기본적인 가족의 이미지로 잔존해 있다. 역사가 린 헛트

1) “<후진국의인구팽창억제> 위해 대규모 산아제한”. 조선일보 1959년 12월 1일 조간 1면.

2)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를 의미한다. 1970년 한국의 TFR은 4.5로 당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산아제한 외에도 해외 이주, 아동의 해외 입양과 같은 분산 정책, 공공 보건망 구축을 위한 사회 기반 건전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Lynn Hunt)는 “가족 로맨스(Family Romance)는 정치적 경험을 구조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前) 정치적 범주” 라고 말하며,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절대군주정을 권위주의적인 가족 모델로, 공화정은 ‘좋은 아버지’와 ‘모성적인 어머니’를 표상하는 가족의 모델로 만들어, 판화, 소설, 축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이념적 사업을 통해 새로운 체제 모델로서의 가족을 복구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계 중심의 가족으로 재편되는, 즉 가부장제의 존속으로써의 “정상”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1950~70년대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정상 가족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과 닮아있다.³⁾

본고는 이 정상 가족의 모형이 가족계획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 담론으로 회귀해, 한국에서의 실제적 변용을 1953~72년 사이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⁴⁾

이 논문은 세 가지의 논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인구 정책은 푸코의 생명정치적 함의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인구 담론 총체의 일부이다.⁵⁾ 둘째, 가족계획사업은 인구 담론의 일부임과 동시

3) Lynn Avery Hunt. 『프랑스 혁명의 가족로망스』 (1999, 새물결).; 이 외에도 정상 가족의 재현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웹소설” 장르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한국의 콘텐츠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웹소설은 10~30대 여성들이 주소비층으로, 상위 순위권에 드는 작품들을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이라는 결말이 세대 여성들에게 잘 호소되며 여전히 정상 가족의 모형으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2019).

4) 1940~50년대의 신문에서 언급되는 인구 관련 동향을 확인해본 결과, 인구과잉 및 인구조사, 유행인구에 대한 소탕이 주를 이룬 내용에서 1953년부터 세계인구 수치와 인구 동태를 문제시하는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해 1954년에는 인구 관련 기사가 다변화된다. 이에 주요 분석의 시작점을 1953년으로 삼았고, 이후는 본고에서 주로 다룬 연구 자료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1972년까지를 종점으로 삼았다.

5)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2011, 난장), 158~159쪽. “...이제 가족은 인구 내부의 한 요소로, 인구의 통치를 중계해주는 기초 단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중략) 이제 가족은 그저 성행위, 인구통계, 자녀의 수, 소비 등과 관련해 인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특권 정도를 누리는 인구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모델에서 도구로, 인구의 통치를 위한 특권적 도구로 변해갑니다. (중략) 둘째로, 인구는 무엇보다 통치의 최종 목표로 등장합니다 ... 통치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구에게 작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게 출생률을 부추기거나 인구의 흐름을 이런저런 지역이나 행동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구는 주

에 국가 간 지적·물적 교류, 즉 전지구적 전파의 산물로서 인구 담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족 담론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셋째, 가족 담론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족계획사업은 한국에서의 정상 가족의 원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본고의 논지를 발전시키기에 앞서 지금까지 인구 담론과 가족계획을 둘러싼 여러 연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폴 에를리히(Paul R. Ehrlich)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⁶⁾ 매튜 코넬리(Matthew Connelly)는 인구 조절과 인구 정책의 역사를 다루며, 중국, 인구, 이란에서의 인구 관련 정책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지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⁷⁾ 위 연구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구 담론의 전체적인 양상과 흐름에 대해 주목했다.

한국의 가족계획과 관련된 세부 기획 면면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광명은 당대 정책입안자들의 논리를 통해 가족계획정책의 입안 배경을 밝히고 있다.⁸⁾ 이명선은 가족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향후 가족계획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한다.⁹⁾ 조은주는 가족계획사업을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활용해 냉전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인구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이라고 지적한다.¹⁰⁾ 김홍주는 국가의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의 기제로 “가족계획사업”을 지목하며, 국익증대를 위한 가족정치가 보편적인 가족의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권자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통치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푸코는 왜 근대 사회에서 인구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인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푸코는 생명정치(biopolitics, 생명life을 다루는 정치)의 대상은 개별 인간 단위가 아니라, 인구 수준에서 측정되는 객관적인 요인으로서의 집합적 실체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통계학, 인구학, 전염병학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을 출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인구를 위한 교정·치료·최적화를 통해 개인과 집단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6) Paul R. Ehrlich, *Population Bomb*, New York: Vail-Ballou(1969).

7) Matthew James Connelly, *Fatal Misconception: The Struggle to Control World Popul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2008).

8) 박광명. 「5·16 군사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입안 배경과 논리」. 『동국사학』 Vol 62(2017).

9) 이명선.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B. 가족계획에 대하여」. 『여성학논집』 Vol.7 No.-(1990).

10)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2018).

다.¹¹⁾ 김연주와 이재경은 5명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통해 서구 근대성을 드러내는 가정주부가 전통적인 성역할의 재생산 및 근대 핵가족의 정상화에 기여했음을 드러냈다.¹²⁾

최근의 연구 역시 가족계획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존 디모이아(John P. DiMoia)는 박정희 시대 국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 도입과 한국의 공공보건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국내의 벽지와 도심에서의 대중매체 활용 및 가족계획어머니회라는 부녀조직 동원 사례를 통해 가족계획의 유산을 분석한다.¹³⁾ 이동원은 6·25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역사성을 살피고, 보건의학계의 형성 과정을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공중보건 활동 및 도미유학생 출신의 국내 의사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¹⁴⁾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가족과 가족계획사업을 근대성, 정치적 연관성, 젠더의식, 보건계의 발달 등 결과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면, 본고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앞선 연구사적 흐름과 달리 “가족” 개념 자체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2장은 서구에서 인구 담론이 형성되고, 전파해나간 역사적 계보와 함께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집단을 세 부류(미국, 일본, 북유럽-스웨덴)로 나누어 글로벌한 인구 담론의 전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주로 국외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 록펠러 재단 아카이브 센터(Rockefeller Foundation Archive Center, RF)에서 Population Politics, Development와 관련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국제

11) 김홍주.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Vol. 25(2002).

12)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 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구술생애사 사례 분석」. 『가족과 문화』 Vol. 25 No. 2(2013).

13) John P.DiMoia. “(Let’s Have the Proper Number of Children and Raise Them Well!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Family Planning and Nation-Building in South Korea, 1961-1968”.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20.

14) 이동원.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동국사학』 Vol.69 No.-(2020).

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opulation Politics Federation, IPPF), 패스파인더 재단(Pathfinder Foundation, PF), 불임시술협회(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 AVS),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 PC) 등과 같은 기관의 활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관의 문서들은 뒤의 장에서도 계속 활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한국 가족계획을 추동한 요인 중 하나인 “(대한)가족 계획협회”를 다룬다. 인구 담론에서 가족 담론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족 계획협회 초기 인사와 활동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당대 “가족”의 의미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한가족 계획협회”와 관련된 저작물과 해당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집, 구술사료선집과 함께 당대 인사 및 일반 대중의 반응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신문(『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을 이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은 앞선 장에서 파악한 가족계획협회의 주된 활동과 그를 통한 “가족” 의미의 실증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계획협회가 발간한 월간지 『가정의 벗 *Happy home*』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어떤 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로컬화된 맥락에서의 “가족”의 의미가 존재하는지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결론으로 인구 담론의 계보 속에서 한국의 인구 담론이 그 연속선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지니는 “정상 가족” 개념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II. 인구 담론의 형성과 전파

20세기 중엽까지 세계에는 발전이 미진해서 기껏해야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인구 추계만이 존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다. (중략) 그 이전 세기(17세기)에서도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범위에 한해서는 머릿수를 세거나 추정하는 작업이 수행되곤 하였다. 이는 종종 재정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¹⁵⁾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관심이 생명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어갔다. 의학, 과학, 토목학, 수학 등 생명체의 생존과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이러한 영역 속에서 전체로써의 생명은 18세기 이전까지 단지 흐릿한 상으로만 존재했다. 인구학자인 리비-바치(Massimo Livi-Bacci)에 의하면 18세기 이전의 인구관은 가용 토지, 자원, 식량을 파악하기 위한 재정적인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많은 수의 인구 혹은 증가하는 인구’는 부의 지표로 여겨졌고, 인구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맥락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¹⁶⁾

이러한 인구관은 18세기를 기점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읽어내는 인식의 격차가 썩워진 뒤에야 개개의 생명이 하나의 집합, 즉 인구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⁷⁾ 인구는 동질하거나 유사한 범주로 묶

15) Massimo Livi-Bacci. 『세계인구의 역사』. 도서출판 해남(2009). 38쪽.

16) 인구 개념이 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8세기 이전의 인구는 단순히 사람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한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18세기 영국 인구의 성장은 경제사가들에게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고, 토마스 맬서스의 시대 이후로 인구 변화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인구학적 구조 변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세기 이전 영국의 인구데이터는 부정확했다. 1801년 전의 국가 센서스는 없었고, 시민의 출생, 결혼,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은 1837년까지 시작되지도 않았다.” Peter Razzell, “The Growth of Population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A Critical Reappraisal,”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3, No. 4(Dec., 1993), p. 743.

17) 오경환. 「모아진 몸-프랑스 제3공화국 인구감소 논쟁으로 본 푸코의 개인, 인구, 통치성」. 『서양사론』 Vol.0 No.103(2009).;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2018).

을 수 있는 완전한 개인으로 구성된 집합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18세기 산업혁명이 추동한 일련의 사유체계들과 결합하며 부상했다.

푸코는 근대 이후 분기하기 시작한 권력의 지평을 구분한다.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그 이전의 권력 형태를 삶과 죽음의 권력, 즉 주권권력(sovereign power)이라 명명했다. 생명권력(bio-power)과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은 근대의 새로운 권력 양상이다. 생명권력은 “건강과 위생, 출생률, 수명 등에 개입하는 일련의 지식과 제도를 통해 전체로서의 인구를 향하는 새로운 권력의 양상”을 의미했다.¹⁸⁾ 규율권력은 개별화 차원에서 규율을 통한 개인의 정상화(normalization)을 뜻한다.¹⁹⁾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 인구는 자신의 몸에 행사되는 두 가지 권력의 작용을 통해 사회적 주체로 구성됨과 동시에 사회에 종속된다. 즉 인구는 지식과 권력의 축과 관계를 맺고 있음과 동시에 그 관계와 구별되는 독립된 ‘주체를 형성(Subjectivation)’ 하였다.²⁰⁾

이러한 인구 담론의 형성은 사회 전체와 관계를 맺으며 변화를 일으켰다. 영유아 생존률 상승, 통계학의 발달로 인한 인구 동향의 가시성 확대, 개인과 공공의 위생 수준 향상, 성과학의 등장, 정상성의 구축과 비정상성의 확립²¹⁾ 등이 그것이었다. 당시 유럽의 국가들 역시 인구 담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양태를 보였다.

먼저 영국의 경우, 인구 담론이 위생, 우생학과 연계되어 여성의 서사를

18) 생명권력(생체권력, Bio-power, bio-pouvoir)는 기능으로서의 신체를 규율하는 해부-정치학과 인구를 조정 및 관리하는 생정치학이라는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근대 이후 그 정도가 더 구체화되는데, 인구의 전체적인 조정과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인을 주체화 및 규격화하는 정치 테크놀로지로 작용한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2002).

19) 규율권력은 권력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육체를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권력에 의해 육체가 길들여지는 방식으로 규율이 육체에 작용하고, 그것을 통해 규율이 개 개인을 사회적 주체로 만들어낸다. 정재철. 『문화 연구자』. 커뮤니케이션북스(2013).

20) 안은희. 「푸코의 사유에서 주체화(subjectivation)의 의미: 들뢰즈의 푸코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학술』 제10호(2023).

21) 정상적인 성과 사랑의 관념이 자리를 잡고, 페티시즘, 복장도착, 관음, 노출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 도착이 분류되며 이름이 붙여졌다.

재구축하는 양태를 보여준다. 산업혁명 이후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인구가 도시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전염병과 도시위생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1842년 채드윅(Edwin Chadwick)의 『영국 노동인구의 위생 상태에 대한 보고서』 발간과 1848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의 제정 등의 움직임은 필두로 의료 전문가가 아닌 관료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위생개혁 운동은 의학적 개선보다도 도시 인프라 구축, 노동 빈민의 환경 개선이 주요 논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집 밖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행태를 지양하도록 모든 소도시와 대도시에 상하수도를 설치했다. 의사와 목사 등 계몽을 전담하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새로운 위생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불결한 생활을 지속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겨졌고, 사회가 정한 적합한 기준에 벗어나는 인구 집단을 “정화”하기 위한 공공위생은 점차 우생학적 논리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우생학자인 존 베리 헤이크래프트(John Berry Haycraft)는 1895년 저서 『다윈주의와 인종의 전진』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근절하지 않으면 열등한 유형이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²²⁾ 물론 이러한 위생개혁은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가족과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던 여성은 위생학의 출현으로 각종 질병의 위협에서 가족을 지키며, 가족에게 위생 관념을 가르치는 사회적 책임까지 부여받았다. 의학논문, 품행지침서, 여성잡지와 같은 여러 서적은 여성이 가정에 종속되어야 하며, 유순한 여성상이 미덕임을 강조

22) 프랭크 M. 스노든, 『감염병과 사회』, 문학사상(2020). John Berry Haycraft, *Darwinism and Race Progress*, SWAN SONNENSCHNEIN & CO.,LTD(1900).; 우생학적 논리는 20세기 중반을 지나며 점차 강화되었다. 1918년 마리 스톱스(Marie Stopes)는 『결혼 후의 사랑』에서 ‘가족계획 planned parenthood’를 옹호하며 영국 전역에 가족계획진료소를 열었다. 우생학은 전쟁과 만나며 심화되었다. 우생학은 그 자체로 인간을 우월과 열등,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기준선에 미달되는 인간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전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강건한 군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동시에 그러한 병사들을 쉽게 소모했다. Marie Carmichael Stopes, *Married Love: A new Contribution to the Solution of Sex Difficulties*, The Critic and Guide company 12 MT. MORRIS PARK WEST NEW YORK(1918).

하는 내용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질서에서 반하면 ‘억센 여성’이라는 낙인이 붙여졌다.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고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²³⁾

반면 프랑스에서도 위생 개념의 발견과 통계학의 활용을 통한 인구 담론으로의 편입이 돋보인다. 당시 파리는 구정물과 사체로 뒤덮인 비포장도로와 물부족으로 인해 씻지 못하는 시민들이 즐비했다. 도시가 과밀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되었고, 콜레라, 천연두,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들이 확산되었다. 관료들은 계몽운동과 더불어 파리의 의과대학을 배경으로 도시 개혁 개념을 들며, “위생”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그러나 이 위생 담론은 도시 개혁이라는 공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문란, 도박, 병증, 일탈을 예방한다는 명목에서 사적 영역으로도 확산되었다. 푸코는 “... 살균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힘입어 성병에 대한 오랜 공포를 되살리고 공중보건의 최신 제도에 힘입어 광범위한 진화론적 신화를 끌어들이므로써 위생에 대한 절대적 요청의 종심(終審) 재판소로 자처했고, 사회제(사회적 육체)의 물질적 활력과 도덕적 청렴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으며, 결함을 지닌 사람이나 비정상인 또는 퇴화된 주민을 일소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히며 과학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인종차별이 정당화되었다고 말한다.²⁴⁾ 더불어 국가에 산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범죄, 자살, 전염병, 생물학적 사실에서 우연이라 여겨졌던 요소 간의 통계적 규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료들은 통계를 통해 길들여진 우연을 통해 분류 체계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규범을 부과했다.²⁵⁾

새로이 국민국가를 건설 중이던 독일은 인구 담론에 있어 18세기 이전의

23) 권오영 외 7인. 『도시를 보호하라: 위생과 방역으로 세워진 근대 도시 이야기』. 역사비평사(2021).; 프랭크 M. 스노든. 『감염병과 사회』. 문학사상(2020).;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몸과 생명정치로 본 서양사』. 푸른역사(2011).

24) Foucault Michel. 『성(性)의 역사』 (2012, 난장), 64~65쪽.

25) 이언 해킹.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2016, 난장), 269~290쪽.

입장을 고수했다. 인구의 산술적인 증가는 국가의 부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에 고민을 안겨주었고, 여기서 독일은 국가의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의학과 함께 의사경찰(Medical Police)제도를 택하게 된다. 프랑크(Johann Peter Frank)는 『의사경찰제도(System einer vollständigen medizinischen Polizey)』에서 의사경찰이 인구 증가 유지,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 확립, 보건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음을 밝혔다. 의학자 라이히(Edward Reich)의 『위생체계(System der Hygiene)』는 위생학을 정신위생, 사회위생, 영양위생, 경찰위생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뉘, 당시 위생학에서 의사경찰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 산업화가 가져온 인구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사회의학은 의사경찰을 통해 공중보건 및 사회위생에 치중하였지만, 이후 사회정책과 사회복지로까지 그 외연을 넓혔다. 이렇게 독일에서 보건위생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의 국가 권력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⁶⁾

영국은 위생개혁과 우생학, 여성의 주변화를, 프랑스는 위생학과 통계학의 정립을, 독일은 사회의학의 탄생과 의사경찰의 활동을 통해 인구 담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19세기 무렵까지의 인구 담론은 국가별로 그 실재적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전체로서의 인구와 개인으로서의 인구 모두를 주체화하는 동시에 종속함(Subjectivation)으로써 인구 담론으로의 전환을 드러냈다.

19세기까지의 보편적인 인구 담론이 일국사적인 양태였다면 20세기의 인구 담론은 전지구적 맥락에서의 양태가 두드러진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스

26) 이종찬. 「19세기 독일사회의학의 역사적 발전: 예방의학의 역사적 복원을 위한 하나의 시론」 『의사학』 제3권 1호(1994).; George Rosen. *What is Social Medicine? In From Medical Police to Social Medicine: Essays on the History of Health Care*.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4: 60-119.; George Rosen. "The Fate of the Concept of Medical Police, 1780-1890" *Centaurus* Vol 5, Issue 2(1957).

칸디나비아 3국 중 하나인 스웨덴을 통해 이러한 인구 담론의 전지구적 확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보편화된 인구 담론을 세계 체제화 하였다. 물론 과거 미국은 도시의 인구 증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유럽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리의 쓰레기 및 오폐수가 질병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²⁷⁾ 1870~1930년대 사이의 미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각 시청에서 위생 공학자를 고용했고, 이 밖에도 위생 개념의 도입, 종교적 함의를 지닌 지식인들의 계몽운동, 실험과학의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사회·환경적 문제를 점차 개선했다. 하지만 19세기 말 부족한 노동력을 감당하기 위해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우려와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오히려 가중되었다. 이는 1890~1920년 사이 우생학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자리잡은 우생학적 함의는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심화되었다.²⁸⁾ 인구의 “양(quantity)” 적 고려뿐만 아니라 “질(quality)” 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종전에 뒤이은 경제적 호황, 새로운 복지형 국민국가의 탄생,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이 큰 폭의 인구 증가를 불러왔다.²⁹⁾ 이러한 내부적 담론화를 바탕으로 미국은 전지구적 인구 담론 전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유색인종의 증가 및 사회주의 진영의 확산에 대한 공포가 전후 이민제한정책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미국의 인종구성을 균일하게 유지하게 위해 이민자의 주류를 이루었던 남유럽과 동유럽 출신자의 이민을 막았던 것이 대표적

27) 수전 캠벨 바틀레티. 『위험한 요리사 메리』. 돌베개(2018), 38~39쪽.

28) 김대현. 「일본의 우생학에서 미국의 우생학으로: 해방 이후~1950년대 한국의 소년범죄 담론」. 『역사문제연구』. Vol 26 No 3 (2022), 315~316쪽.

29) 녹색혁명은 20세기 후반 농업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식량증산을 이뤄낸 농업정책이다. 냉전기 적색혁명을 막기 위한 미국의 세계 전략 중 하나로, 1944년 미 정부,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등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지에서 쌀과 밀,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생산량 증대에 성공한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초 ‘통일벼’ 개발에 성공해 미국증산에 기여했다. 이러한 녹색혁명의 성공은 미국 내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왔다. 미국은 1920~30년대에 약 3.21의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1920~30년대 말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1940년을 기점으로 1960년대에는 3.58로 합계출산율이 다시 증가하는 식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다. 아시아인들의 생식능력(중국과 인도)과 일본의 급속한 현대화에 대한 두려움 역시 서구 백인들로 하여금 인구적 주도권 상실에 대한 불안을 촉발했다. 이는 미국이 열전에서 냉전으로 이어지는 국제 질서 하에서 ‘3세계’라는 인구 지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이자 인구통계학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는 결과를 낳았다.³⁰⁾ 그린할(Susan GreenHalgh)에 따르면 당시 인구문제가 “안보”의 위기라는 침예한 인식이 존재했고, 인구통계학이 냉전적 논리에 기반하여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사실은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³¹⁾ 그린할의 지적을 뒷받침하듯이 미국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 도처에 인구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등장했다. 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³²⁾, 패스파인더 재단(Pathfinder Fund, PF)³³⁾,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RF)과 그 산하의 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 PC), 불임시술협

30) 조은주. 「인구의 자연성과 통치 테크놀로지」. 『현상과인식』, Vol 38 No.4 (2014), 198쪽.

31) Susan Greenhalgh,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pulation Science: An Intellectu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History of Twentieth-Century Demograph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8,1(1996):26ff.

32) IPPF는 가족계획을 인구조절과 모자건강 및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양 측면에서 연구하는 단체로,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가 주축이 되어 1952년 인도 뭍바이에서 인도·독일·네덜란드·홍콩·싱가포르·스웨덴·영국·미국 8개국의 가족계획 관련 민간 대표들이 모여 설립했다. 한국은 1961년 가입해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PPFK)라는 지부를 뒀다. 본부의 사업 기술 자문과 피임시술 연수 등 국제협력사업의 수혜를 받아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33) 설립자 클라렌스 갬블(Clarence J. Gamble)은 우생학과 가족계획의 지지자로 산아제한 협회 및 가족계획협회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피임이 얼마나 이로운지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 단체들에서 활동하였다. 1957년 클라렌스 갬블이 설립한 Pathfinder Fund는 해외의 산아제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 초창기 단체 중 하나였다. 단체가 아닌 개인이 인구 관련 활동에 자금을 낸 것은 미국인 중에서 클라렌스 갬블이 처음이었다. 그의 사후 1966년부터는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상당한 자금력이 더해져 그 규모를 더욱 확장했고, 국제인구통계분야의 주력 기관이 되었다. 주력 활동 분야는 성과 재생산권 확립 및 가족계획, 성병 예방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 이 기록에 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 참조. “*Betting with lives: Clarence Gamble and the Pathfinder International*”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July 1, 1996. (<https://www.pop.org/betting-with-lives-clarence-gamble-and-the-pathfinder-international/>, accessed 2023.9.8.)

회(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 AVS)³⁴⁾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 모두 지향하는 인구 문제의 초점은 상이했지만 국가의 냉전 외교 전략, 즉 3세계의 적색화를 저지하겠다는 의도와 맞닿아있었다. 그 결과 냉전의 격전 지이자 3세계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 역시 미국의 안보관에 포섭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이른 근대화를 맞이했다. 그리고 미국이 보편화된 인구 담론을 세계 체제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인구 담론을 주변 식민지에 이식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말기인 1900년대에 우생학에 찬동하는 흐름이 등장했다.³⁵⁾ 문명 개화와 근대적 국가 건설을 위해 “혈통 유전의 미(美)를 선택하도록 국민이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우생학적 논리가 확산되었다. “결혼의 이상은 우량한 개체를 산출하는 데 있다”라는 민족위생학에 입각한 우수 인자 간의 연애 결혼이 장려되었다.³⁶⁾ 출산이 공적 체계로 흡수되며 뮐러(Bejamin Karl Leopold Müller), 베르니히(A. L. Wernich)와 같은 독일계 의사들을 필두로 산과학(산부인과학)이 독자적인 분과로 자리잡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맡은 산파(조산사) 역시 서양의학 교육을 받은 뒤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를 발급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³⁷⁾ 이 밖에도 1922년 미

34) 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은 1930~40년대 초 뉴저지 지역에서 부모로 부적합 사람들의 불임을 장려하기 위한 불임 연맹에서 출발한 단체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불임시술을 지지하기 위해 1960~7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 시민의 64%가 불임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인구 증가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불임 금지에 대한 법 조항을 철폐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 밖에 공공보건과 복지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에 자발적 피임의 이점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Population Council records, Accession 1, RG 1(FA210). Box 98, Folder 1812, 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1956-1966), Rockefeller Archive Center.

35) 후쿠자와 유키치의 『시사소언』, 우지하라 사조의 『민족위생학』이 출간되면서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생학이 주요 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 우생학은 서구의 우생학이 인종적 위계를 통해 백인종의 우월함을 담보한 것과 달리 일본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 서양인과 경쟁할 수 있다는 민족주의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호연. 「우생학, 국가, 그리고 생명정치:의 여러 형태들, 1865-1948」. 『동국사학』 66집(2019.6).

36) 가토 슈이치. 『연애결혼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성도덕과 우생사상의 100년간』. 소화(2011); 우생학은 일본인의 집단적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의미로 “민족위생학”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리기도 했다.

국 내 가족계획운동을 이끈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의 방문과 록펠러 재단의 록펠러(John D. Rockefeller) 3세의 방문은 일본 내에 인구 담론을 고양시켰다.³⁸⁾ 이러한 내부의 열기는 외부로도 확산되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그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당면의 급무는 조선인을 유도계발하여 문명의 역에 나아가, 그럼으로써 충량한 제국신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이 한국병합의 본지로서 타국의 사례와 다른 소이다. 고로 한국의 병합은 단지 국제상의 화근을 없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소이일 뿐만 아니라, 팔만여 방리의 국토, 일천삼백여 만의 인구를 더해 제국의 확대안고(擴大安固)를 이루는 것이다.³⁹⁾

당대 총독부의 시정 방침이 보여주듯이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개조하는 것은 일본의 핵심 과제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식 법제가 도입되었다.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가족에 대한 관념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용될 수 있을만한 유교적 논리로 대체하고, 조선과 일본의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민적법(가족법)과 가족제도를 구축하였다.⁴⁰⁾ 민적법은 조선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일본의 국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

37) 국사편찬위원회. 「출산과 여성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 『구술사료선집25』 (2018), 9쪽.; 국사편찬위원회. 「산파에서 조산사로, 한국 출산 문화의 변화」. 『구술사료선집24』 (2017), 9쪽.

38) RF 인력이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연구는 인구 프로그램 수립(Population Program Making)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파견 조사단의 시찰과 잇따른 보고서의 내용은 John D. Rockefeller 3세로 하여금 RF와 분리된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 PC 창설로 이어지게 된다. Aiko Takeuchi. "The Transnational Politics of Public Health and Population Control: The Rockefeller Foundation's Role in Japan, 1920s-1950s". Rockefeller Archive Center.; 특히 1920년대에 우생학 잡지가 간행되고, 우생학 단체들(대일본우생회, 일본 우생학협회, 일본민족위생학회)이 결성되었다.

39)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식민주의와 가족·법·젠더』. 동북아역사재단(2021), 15쪽에서 재인용

40) Ibid., 38~45쪽. 조선시대 '가장'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가(家)를 대표할 경우에 쓰이는 용어로, 가의 책임자, 대표자를 가장으로 지칭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가장은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의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가장'으로 불렸다.

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총독부는 개개의 조선인을 “가(家)”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가족 공동체인 동시에 법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법적 존재로 전환됨으로써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 전환될 여지를 제공받았다. 더불어 이러한 “가” 중심의 민적법에는 남녀를 이원화함으로써 양자에 차별을 두는 가부장제와 부계혈통 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새로운 “가족”을 발명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⁴¹⁾

미국과 일본 외에도 인구 담론의 전지구적 확산을 확인하기 위해 스웨덴의 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보편적인 인구 담론의 발원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자연스럽게 우생학과 신멜서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앞선 국가들이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우생학을 고려했다면,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우생학을 활용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동질적인 사회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노르딕 민족주의, 과학과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강력한 복지국가를 추구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 및 출산률 하락과 외국인 혐오의 정서는 1930년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 정신질환자, 노동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았다. 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시설은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방종과 문란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주류 위생학에서 유전, 퇴보, 빈곤, 의학에 초점을 둔 개혁 우생학의 흐름으로 이어졌다.⁴²⁾ 지식인과 정책입안자들은 부적격자를 의학적·사회공학적인 관점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여겼다. 부적격자의 수적 증가를 막는 것은 노르딕 인종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사회복지비

41) Ibid., 78~81쪽.

42) 앤 커의 『장애와 유전자 정치』의 구분을 따르면, 주류 위생학은 프랜시스 골턴의 분류에 따라 포지티브 우생학(우수 인자의 재생산)과 네거티브 우생학(정신적·도덕적으로 부적합 인자의 재생산 방지)을 뜻한다.

용 경감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지받았다. 뤼르달(Gunnar Myradal)은 이주민, 외국인의 유전병과 우수 인자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하였다.⁴³⁾ 브로베리(Gunnar Broger)와 튀덴(Mattias Tyden)은 『우생학과 복지국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의 단종수술 정책』에서 “늙고, 불결하고, 병든 존재들을 일소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신체위생학(physical hygiene)에 대한 전념에서 시작하여, 결함을 지닌 유전자로부터 자유로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우생학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하겠다는 열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라고 말한다.⁴⁴⁾ 실제로 1934~35년까지 북유럽 국가에서 단종법(the Sterilization Act)이 시행되었다. 이후 스웨덴에서는 1976년에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반항적이거나 문란한 사람, 지능이 낮거나 혼혈인 사람(주로 여성들) 62,000명이 당국에 의해 강제 불임 조치를 시행받았다.⁴⁵⁾ 스웨덴은 이처럼 우생학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20세기의 세계체제화된 인구 담론의 사례를 미국, 일본, 스웨덴을 통해 살펴해보았다. 미국은 인구 과밀화와 도시 문제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위생 계몽 운동, 실험 과학의 발달, 도시 환경 개선이 연쇄작용을 하며 인구 문제를 일

43) 스웨덴에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북유럽인”에 대한 공통적인 관념이 존재했다. 20세기 초 농업 경제에서 근대 산업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루터파 기독교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한편, 과학과 기술이 사회 변화에 중요한 변화를 맡았다. 그리고 여타 유럽 국가와 대조적으로 사민당(사회민주당)이 1920~3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집권을 지속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세기 초 스웨덴은 인구의 6분의 1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며 인종적 우려가 확대되었다. 1930년대 그러한 외국인 혐오의 정서(유대인 의사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해 온 것에 대해 반발하는 학생 시위)뿐만 아니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인구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 가고 있었다. 1934년에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류 우생학에서 개혁 우생학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군나르 뤼르달(Gunnar Myrdal) 같은 사람들의 작업에서 나타는 것처럼 출산의 질보다는 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혼혈에 관한 구래의 이론들은 유전병에 대한 유전학 연구들로 대체되었다. 앤 커, 톰 셰익스피어. 『장애와 유전자 정치: 우생학에서 인간계놈프로젝트까지』. 그린비(2021), 126쪽.; 오경환. 「발전 경제학의 대안적 경로-군나르 뤼르달의 경제학적 사유의 특징과 한계」. 『사총』 99권(2020), 329~359쪽.

44) 앤 커, 톰 셰익스피어. 『장애와 유전자 정치: 우생학에서 인간계놈프로젝트까지』. 그린비(2021), 149쪽.

45) Hyatt, Stephanie. "A shared history of shame: Sweden's four-decade policy of forced sterilization and the eugenic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Ind. Int'l & Comp. L. Rev.* 8 (1997): 475.

소하는 듯 보여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였고, 우생학이 발흥하게 된다. 이는 이민제한정책과 3세계 국가들에 대한 개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일본은 이르게 근대화를 수용하며 인구 담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문명화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우수한 인자를 개량하는 민족우생학과 함께 연애 결혼이라는 새로운 결혼관이 유행하게 되었고, 여성의 출산이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우생학을 견지한 일본의 인구 담론은 식민 지배의 대상이었던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현재 오래된 관습처럼 여기는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의 원형이 탄생하게 된다. 스웨덴은 앞선 국가들이 대체로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던 상황과 반대로 인구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인구가 감소한 만큼 우수한 인자를 많이 생산해내자는 목표 아래 우생학이 힘을 얻게 된다. 외국인, 혼혈아, 병자, 노인, 부진아와 같이 국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생식기능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인종생물학에 기반을 둔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근대 초기 등장한 일국사적 맥락의 인구 담론은 20세기 들어 전지구적 맥락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수용된 인구 담론은 자생적인 담론 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주변부로 확장되었고, 세계체제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담론의 거대한 계보가 어떻게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에 실질적으로 착종되는지에 대해서는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Ⅲ. 가족담론으로의 전환과 대한가족계획협회

앞선 장에서 인구 담론이 형성되는 지적·물적 배경과 함께 보편적인 인구 담론의 양태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족계획이 어떻게 성립하였고, 가족계획협회가 가족계획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상 가족”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인구 담론의 형성은 식민지 시기의 가족에 대한 지적·제도적 투입과 미군정 시기의 인구 담론의 유입으로 이루어졌다고 거칠게 정리할 수 있다. 즉 식민지 시기의 법률과 제도의 재구축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정하고, 냉전과 더불어 유입되는 전지구적 맥락의 인구 담론이 투여되며 가족계획사업을 이끌어 간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 시기 인구 자체에 대한 관심은 산발적으로만 등장한다. 일례로 잡지 《삼천리》는 상급학교 졸업을 앞둔 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인구 정책의 일부로 여겨지던 산아제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⁴⁶⁾ 반수 이상은 산아제한을 소망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질문의 의미조차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일부 학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자녀를 적게 나서서 전력을 다해야 길느는 것이 인생의 할 바 임무라고 보아집니다. 경제상으로 말하드래도 적게 낳는다는 것은 펍으나 조혼 방책이라고 생각해요.” 라거나 “가난뱅이 아희 만희 낳는 것은 실혼 일이지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97> 책임있는 교육을 식힐 수 있을만 정도에서 자녀를 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혼 자식을 아모러케나 길느기 보다 적은 아희 잘 기느는 것이 조혼 일이겠지요. 이것은 그 자식에게 뿐 아니라 부모의 행복도 될 것일 줄 아려요.” 라고 답하며 산아제한에 대

46) 「심경타진, 여학생들은 산아제한을 소원하나, 울분 졸업생들의 심경타진」 삼천리 제5권 제4호. 1933.04.01.일자.

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가벼운 읽을거리 위주의 월간취미잡지 《별건곤》에서도 산아제한에 대한 당대 한국인들의 원형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종종 보고 듣는 바이다. 아이 많은 집안은 언제나 생활의 빈곤을 면치 못한다. (중략) 미국의 어떤 박사는 말하되 아이를 대중없이 자꾸 많이 낳는 민족은 언제나 번영하지 못하고 자멸한다고 했다. 그 박사는 그를 민족자살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아이 많이 낳는 것은 분명히 민족자살이다. 그 예로는 멀리 다른 민족을 찾을 필요가 무엇이랴. 그보다 아이 낳는 것을 부모 스스로가 제한해 그 아이를 충실히 건전히 교양해 사회의 개선, 종족향상에 가치 있는 사람을 내는 것이 얼마나 그 집안이나 그 민족의 장래를 위해 유익한 일인가.” 47)라고 성토했는 지식인이 있는 한편, 젊은이들은 “나는 절대 찬성입니다. 다각애(多角愛)하는 여자로서 산아제한이 없다면 그 놈의 아이를 어찌 다 주체하며 또 아버를 바로 찾아주기에 머리골이 아프니까요.” 48)라거나 “산아제한만 하게 된다면 나는 양옥집이 또 한 채 생길 모양이니까 대찬성입니다. 밀매하던 낙태약을 공매한 들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49)라며 산아제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산발적인 반응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동안 산아제한을 비롯한 인구 담론은 핵심적인 논제가 아니었다. 우생학적 관점에서의 산아제한을 인지한 지식인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 역시 산아제한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산아제한의 근본 취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⁵⁰⁾ 1950년대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찍이 미국과 일본 등의 국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과 정책입안자들은 인구담론과 발전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분단, 남북한 총선거 등의 정치적 현안들이 인구 담론의 전개를 가로막았다.

47) 金光錫(김광석). 「問題의 問題, 아해를 만히 낳지 말자」 별건곤 제40호. 1931.05.01.일자.
 48) 「大大諷刺 新春誌上座談會: 産兒制限問題(산아제한문제)」 별건곤 제26호. 1930.02.01.일자.
 49) Ibid.
 50) “국도신문, 산아제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국도신문』 1949년 10월 17일.

하지만 한국의 인구 지형을 지탱하는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이후 한국의 인구 담론에 변주를 이끌었다. 하나는 발전주의에 기반한 국가 건설 사업(Nation Building)이었다. “이 대통령(이승만)은 ‘경제안정을 보게되는 이때 정부는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사회악 제거에 적극 힘쓰라’ 고 말하였다” 라고 말하며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은 이어 (중략) KAVA(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주한 민간 원조 기관 연합회)와 협력하여 한층 더 빈민구호사업을 강화하라고 유시하였다.” 라며 빈민구호 등과 같은 사회재건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⁵¹⁾ 즉 50년대 말부터 산아제한 역시 국가 발전의 목적에서 일부로나마 취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가 발전과 더불어 생명 정치(Bio-Politics)는 한국 인구 담론이 지향하는 핵심 논제였다. 초기 생명 정치의 초점은 인구 정치(Population Politics)보다는 보건 및 위생 정책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⁵²⁾ 인구정치의 한 방식으로 거론되었던 산아제한에 대해선 당시 보건장관인 최재유씨의 발표를 통해 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산아제한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쉬운 것 같으나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라며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⁵³⁾ 중국의 한자

51) “사회악제거에 힘쓰라” 『경향신문』 1957년 11월 27일자 3면.

52) 한국 전쟁으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와 같은 전염성 질병들이 국민방위군의 이동경로를 따라 확산되었고, 폐허화된 주거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원균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미군에게 있어 시급한 것은 한국에 전염병을 통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신경쓰도록 재교육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었고, 국민은 국가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인구가 관리되었다. “언택(UNCACK)이 한국에서 처음 발족하였을 때 2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죽었다.” 이임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 철수와영희(2020)

53) “성병 박멸 양호” 『경향신문』 1952년 2월 2일자 2면.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건장관 최재유씨는 20일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성병대책) 남한 전체에 사십여개 소성병 진료소를 설치하고 접대부 검진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근처에 노력 중인 바 현재는 그 성적이 차츰 좋아서 종래 성병율 65%가 45%로 감소되었다. (중략) 산아제한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쉬운 것 같으나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녀정책처럼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권고 수준의 산아 제한은 한계가 명백했다.⁵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권 정부가 교체되고, 한국의 인구 정책은 합일점을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보건 및 위생 정책과 인구 정치 간의 협응을 이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960년대에 인구 담론으로의 전환점에 서게 된다. 물론 그 전환에도 몇 가지 과도기적 방해 요인들이 존재했다. 먼저, 군부 쿠데타를 통한 박정희 정권으로의 이양이 주는 국민적 반감이 첫 번째 이유였다. 1961년 들어선 군사정부에 대해 한국 주재 미대사관은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군사정부가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없으며 또 대중적인 열정도 찾아볼 수 없” 다고 지적한다. 군사정부는 정국을 혼란하게 하여, 대중적인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활동을 제한하였다. 다만 국가재건최고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는 별개로 정부 측에서 개혁 과제를 추진하게 되면서 인구 정책은 국가 시책의 전면으로 떠오른다.⁵⁵⁾

다음으로, 구시대의 가부장적 관습과 일제강점기에 발명된 유교적 가족관

54) 계획생육정책(計劃生育政策)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이 강제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한 가정 한 아이 정책’을 말한다. 1950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6.488로 당시 인구가 약 5.5억명에 달했다. 식량, 재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당국은 강제 낙태, 한자녀 정책, 둘째 자녀 출산 시 높은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55) 미대사관은 “군사정부가 여전히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군사정부 내부에 열정과 진심, 그리고 단호함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종류의 전반적인 개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위로부터의 혁명이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개혁 과제들이나 실제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노력들이 현재 실현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환율 정책, 외환정책, 실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공공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탈세와 농업과 노동조합, 교육, 공공행정, 사회보장(교도소 개선안, 매춘부의 재교육, 산아제한 정책, 예비군 지원 정책 등)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정책들이 그렇다...”라고 군사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을 남기기도 했다. 군사정부가 비록 초기에 가족계획협회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곧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족계획을 국가지책으로 삼으면서 가족계획사업이 본격 추진되기에 이른다. ; “쿠데타 정부의 새로운 정책(경제정책)에 대한 설명 및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국 중앙정보부의 위력이 점차 증가한다는 위험신고를 보고”. 한국. FRUS 1961-1963. Volum XXII, Northeast Asia.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appliances.do>, accessed 2023.10.13)

이 잔존해 있다는 점 역시 인구 정책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의 의무는 출산 및 양육에 있다거나,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식의 자녀계획에는 찬동하지 않는다며 온순한 여성을 재생산해내는 식의 논리가 유지되고 있었다.⁵⁶⁾ 이러한 현상은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던 7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한 가족계획계몽원의 구술 기록에 의하면, 가부장적 혈통 승계를 피력하며 계몽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족계획 및 피임에 대해 안내를 하려고) 어떤 집에 갔다가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두들겨 맞을 뻔했어. (중략)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확 오더니, ‘어떤 개년이 남의 손을 끊어 놓으려고 하나. 너 이년.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떡해? 이야기하다 말고 신발을 막 들고 뛰었어.”⁵⁷⁾

세 번째로, 미비한 성교육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성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위한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것과는 멀었다. 우생학적 사고에서 국가에 적합한 국민을 길러내는 내용이거나 아예 그조차도 시행되지 않는 상태였다.⁵⁸⁾ 1955년 7월 24일자 경향신문의 한 기사에서는 남녀대학생 172명에게 생활의견에 대한 설문 결과를 실었다.⁵⁹⁾ 172명 전원이 ‘성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했고, ‘성지식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62명으로 다른 답변 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50년대에 들어선 뒤에도 성교육

56) “... 김(金)과 이(李)는 여성의 금지와 자랑은 애기를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는데 있고 여성의 의무를 함부로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산아제한에 절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수양의 시간도 가질 겸해서 이만 산아조절을 했으면 하나 밖에서 그리 찬동을 안 하고 저 역시 남편의 의사를 거역하고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동시에 이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없습니다.” 정선애. “산아제한시비” 『경향신문』 1954년 7월 18일자 4면.

57) 국가편찬위원회. 「진정한 농민의 협동조합을 위하여(1950년대 이후 이천지역 농민조합운동)/ 가족계획에 헌신하다(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협회 계몽원의 활동)」. 『구술사료선집2』 (2005), 243쪽.

58) 1933년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부인, 진디물을 없애 줍시다. 암컷이 암컷을 낳는 고로, 무섭게 번식합니다”, “부인, 좋은 자녀를 주려면 인종을 개량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연재되었다.

59) “남녀대학생의 생활의견 설문: 남 47명 여 125명을 통해 본 생태” 『경향신문』 1955년 7월 24일자 4면.

보급에 대한 열망은 거세어진 반면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적자원 수급에 대한 불안⁶⁰⁾, 카톨릭을 위시한 종교계의 반발⁶¹⁾, 열악한 의료설비, 국민 대다수의 절대빈곤으로 인한 의료 수가 지급 불가, 의료 상식 부족⁶²⁾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인구 담론을 둘러싼 산적한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관심은 국가 재건, 식민 잔재 청산, 전후 복구와 같은 시급한 현안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면만 본다면 1931년부터 1961년까지 논쟁적인 화두였던 산아제한은 한국에서 변방의 주제로 다뤄진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 담론을 정책화하고 발전을 추동하는 요인들 역시 성장하였고, 국외 역시 인구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분위기와 발맞춰 한

60) “나는 도대체가 반대다. 산아를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나온 말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아제한을 해야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인구가 늘어서 정치를 못하겠다는건가 - 오히려 인구가 늘지 못해 한이며 좋은 어린이가 얼마든지 많이 생겨나야 희망도 생기고 국가를 위해 좋은 인재도 나올 게 아닌가.” 이는 산아제한에 대한 각계인사들의 반대의견 중 하나로 동양화가인 고희동(高羲東)씨의 답변이다. “산아제한은 자연에의 역행” 『경향신문』 1958년 7월 6일자 석간 4면.

61) 산아제한이라는 인위적인 인구 조절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중히 여기는 종교계의 이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였다. 이태리 밀라노의 몬티니 추기경은 1957년 세계 천주교 여신자제 14차 대회에 65개국 대표들에게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산아제한은 헛된 해결책이며 그보다 ‘성생활절제·이민·자선 및 증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아문제해결은 성생활절제” 『경향신문』 1957년 10월 5일자 조간 2면.; 1957년 이어 1958년 9월 15일 바티칸 교황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세어지는 산아제한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수정에 대한 입장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로마 교황 비오 12세는 출산시키기 위하여 인공수정을 한다거나 혹은 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불임 수단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이 아니라고 말하며, 기혼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상기시켰다. “인공수정·피임은 죄악 비오 12세, 혈액학대회서 연설” 『경향신문』 1958년 9월 17일자 조건 1면.; 1961년 9월 26일 한국천주교주교단은 산아제한을 반대하는 교서 ‘인구문제와 산아제한’을 발표하며, 산아제한을 배제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인간을 금수와 동등시하고 유물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결혼 연령의 연장, 축첩폐습의 단호한 시정, 국기(克己 극기)의 정신으로 주기적인 금욕, 해외이민, 외국원조 요청 등을 통해 인구문제와 경제문제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아제한반대한다” 『조선일보』 1961년 9월 29일자 3면.

62) “피임약이 60년대에도 다 들어와 있었네요?”/“아, 그럼요. 근데 그걸 엄마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한 알 먹으면 그 한 알이 효과가 있는 줄 알고 한 알 먹고 끝내고, 그러면 또 브리딩이 나고, 한 알 먹고 또 브리딩, 또 애는 애대로 들어서고.” 국사편찬위원회. 「진정한 농민의 협동조합을 위하여(1950년대 이후 이천지역 농민조합운동)/ 가족계획에 헌신하다(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협회 계몽원의 활동)」. 『구술사료선집2』 (2005), 275쪽.

국의 인구 담론은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인구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다뤄지게 된다. 인구 정책을 위한 지적·제도적 기초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인구 정책의 성장을 위한 지적·물적 토대인 인구 담론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다. 특히, 미군정 집권기(1945~48년)를 전후로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KAVA의 지원을 통한 사회 기반 재건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도미유학을 통한 인재층 양성이라는 교육적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KAVA는 1946년 미군정 하의 선교단체들로 구성된 LARA(Licensed Agencies for Relief in Asia)를 모태로 등장하였다. 외국인간원조기관(외원기관) 한국연합회 KAVA(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1952년 3월 5일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7개 기관의 협조로 설립되었다. 이후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 AKF)로부터 2만 5000달러의 재원을 받아, 33개의 외원단체가 가입하였고, 1965~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연차회의의 기조연설을 맡았을 시기에는 가입 단체의 수가 106개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KAVA는 선교 활동뿐 아니라 아동복지, 기생충 박멸, 사회사업가 육성, 산간벽지 농민을 위한 보건계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인구 정책이 뿌리내릴 토양을 제공했다.⁶³⁾

다음으로 도미유학은 국외의 선진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적 기반을 구축하라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1945년 9월 미군정은 문교부를 설치하고, 문교부 산하의 고등교육국(Bureau of Higher Schools)의 일부로 대학과(Colleges Branch)를 조직해 서구 기준에 따른 교육 체제로의 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47년 8월 문교부 고문에 따르면 “미래의 교사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의

63) 카파40년사 편찬위원회.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KAVA는 사회복지, 보건, 구호, 교육,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다만 전신인 LARA의 영향을 크게 받은 기독교 단체들은 선교 활동을 주로 펼쳤다. 장금현. 「외국민간원조단체연합회(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와 기독교 관계」 『영산신학저널』, 56권(2021).

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한국인들에게 현대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희망이다.”라며 핵심 교사 집단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⁶⁴⁾ 더불어 점령 초기부터 모든 교육 분야 중에서도 가장 절실히 확대가 요구되었던 분야는 의학이었다. 의과 대학 및 의예과 과정의 확대, 의사 및 교수진 수요 확충, 공공 보건 간호 프로그램 및 간호 전문학교의 마련, 공인 조산사 운영 등 보건후생부와의 조율을 통한 교육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현직에 있는 한국인 의사들이 도미 유학길에 올랐다.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RF)의 원조를 받은 10명의 한인 의사들은 하버드, 존스홉킨스, 미시간 등의 보건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하고 돌아와, 한국에 미국식 보건행정이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⁶⁵⁾

이러한 제도적·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인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된다. “가족계획”은 양재모 박사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그는 한국에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정부 차원의 가족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였다. 그 이전에는 1954년 선교사 조지 워스(George Worth, 오천혜)의 계몽 강연을 통해 “가족계획”이 한국의 일반 대중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58년에는 미국에서 인구문제를 연구했던 고헤경 박사의 주도로 대한어머니회가 창립되었고, 대한어머니회는 정부에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⁶⁶⁾ 그러나 양재모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가

64) 국사편찬위원회. 「제9장 교육-IX. 해외에서의 한국인 교육(Education of Koreans Abroad)」 『주한미군사 4』 . (http://db.history.go.kr/id/husa_004r_0020_0100, accessed 2023. 10. 17); 정병준. 「한말 미국 유학 지식인의 서구 “사회과학” 수용과 현실 인식」 『이화사학연구』 44권(2012).; 장영민. 「미군정기 도미 유학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79 No.-(2016).; 장영민. 「1950년대 도미유학과 유학생의 미국」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96 No.-(2021).

65) 국사편찬위원회. 「제9장 교육-VII. 전문 고등교육(Specialized Advanced Education)」 『주한미군사 4』 . (http://db.history.go.kr/id/husa_004r_0020_0080, accessed 2023.10.17.); 이동원.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동국사학』 Vol.69 No.-(2020).

66) 고헤경 박사는 미국에서 사회학, 영문학, 경제학 등을 공부하고 돌아와 여성자립교육과 무의탁소녀 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을 펼쳤고, 미군정에서 초대 부녀국장으로서 활약했다. 이후 1949년 미국의 프린스턴대와 콜롬비아대학에서 1년간 머물며 인구문제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1958년 3월 대한어머니회를 설립했다. 1958년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를 기치로 내세우며 발족되었다. 어머니들을 위한 평생교

족계획협회 결정서 계획안을 제시하며, 비로소 가족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⁶⁷⁾ 동년 4월 1일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각계 대표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가족계획협회 창립 총회가 개최되며,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발족을 알렸다.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창립 1개월 반만에 단체가 해산되었지만, 6월 30일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의 정회원국으로 승인받으며, 협회 활동의 재개를 인정받게 된다. 11월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산아제한을 포함한 가족계획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다.

미군정 집권기를 전후로 한국 사회의 인구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KAVA를 통해 다양한 사회사업이 전개되며 인구 정책이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미유학생은 해외의 선진적인 사례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인구 정책을 실현하고, 이후에도 정책의 성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인재층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냈다. 이 두 요인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창립과 인구 정책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대한가족계획협회가 활동을 개시한 뒤로, 정부가 가족계획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한 것은 한국이 1960년대가 되어 비로소 인구담론에서 가족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인구 정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이었다.⁶⁸⁾

가족계획으로의 전환과 함께 민관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족계획을 위한 선제

육사업, 모권운동, 인구대책 수립 등 어머니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공익사업을 펼치고자 설립되었다. 「바람직한 한국 어머니상」 『대한어머니회 창립25주년 기념문집』 (1983).

67) (양재모) ... “좀 부끄러운 회상입니다만, 손정선씨와 함께 협회결정시 얼토당토 않는 계획서를 국가 최고회의에 제시했던 일이 있어요. 10개년 계획으로 세워 놓았던 결론은 2억만 투입하게 된다면, 출생을 저하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이 2백억으로 불어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거라는 것이었어요. 그 계획서를 심의했던 사람들이 군 장성들이었으니, 망정이니 그 방면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이었다면 큰 창피를 당할뻔 했어요. 그 뒤 보사부(보건사회부)에서 과학적인 통계를 내어 다시 작성했습니다만,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류달영) ...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인 것보다 비과학적인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젠데요, 만약 그 당시 현혹적인 계획서로 정부를 유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발전은 좀 힘겨웠을 꺼 아녜요?” 「창립 10주년 좌담회」 『가정의 빛』 제4권 4호(1971년 4월호).

68) 가족계획은 비록 국가 경제개발 사업의 하부시책으로,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르면, 출생률을 억제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인구 정책이 도입되었다.

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을 펼치며 한국 가족계획 발전의 구심점이 되었던 단체가 바로 대한가족계획협회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61년 4월 1일 양재모, 구신명, 김학묵, 박재빈, 신한수, 유승현, 이영춘, 이한규, 지종상, 하상락, 권순영, 강주심, 김용성, 노경병, 손경춘, 오천혜, 윤석우, 이종진, 정준, 최성율, 황태식, 윤유선 이하 22명의 인사들이 한데 모여 발족되었고, 류달영이 초대 협회장을 맡았다.⁶⁹⁾

가족계획협회를 구성하는 인사들을 통해 당시 가족계획협회가 지향하는 가족계획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창립인사들은 직군상 크게 세 부류의 집단, 즉 의료 전문가, 행정 관료, 사회공학자⁷⁰⁾로 구분되는데, 상당 수의 인사들이 의료 전문가인 동시에 행정 관료를 겸하거나 사회공학자들이 행정 관료를 맡는 등 직군 간의 겹침이 잦았다.⁷¹⁾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 양재모·구신명·박재빈·신한수·유승현·이영춘·강주심·노경병·손경춘·윤석우·이종진·황태식·윤유선의 13명(57%)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 의료 전문가인 동시에 행정 관료를 겸한 이들(의료-행정)로는 윤석우·윤유선·이종진이 있다. 의료 전문가이면서 사회공학자를 겸한 이(의료-공학)는 이영춘이 해당된다. 전체 의료 전문가 집단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되고, 주력 관심분야가 예방의학, 모자보건, 만성병, 산부인과, 공중보건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의료의 현대화 및 공중보건 관련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의료-행정”에 속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만성병, 방역 위생과 같은 공중보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의료-공학”에 속한 사람 역시 공중 보건 계통의 농촌 보건 위생에 관심이 높은 것을 그의 이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9)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정의 빛』 제4권 4호(1971년 4월호). p.13.; 초기 인사들의 상세 내력은 본문 뒷면의 부록을 참조.; 고헌경 박사도 초기 설립인사에 포함되었지만, 협회 주도 층과의 이견으로 해당 자료 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70) 필자는 가족계획협회가 의료, 행정, 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사회 분야의 전문가의 경우 발전주의와 조용해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복지 사업, 농촌 재건, 공공보건 등을 관리한다고 보아, 사회 ‘공학자’(social engineer)로 정의하고 한다.

71) 분석 시에는 각 인물의 대표 이력으로 구분하되, 겹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각 직군에 모두 포함했다.

【표1】 직군에 따른 가족계획협회 인사 분류: 의료 전문가

	소속 인사	관심 분야
의료	양재모, 구신명, 박재빈, 신한수, 유승현, 이영춘, 강주심, 노경병, 손경춘, 윤석우, 이종진, 황태식, 윤유선	예방의학, 모자보건, 만성병, 산부인과, 공중보건, 의료현대화
의료-행정	윤석우, 윤유선, 이종진	(공중보건) 만성병, 방역위생
의료-공학	이영춘	(공중보건) 농촌보건위생

다음으로 행정 관료 집단에는 김용성·김학묵·권순영·윤석우·윤유선·이종진·이한규·정준의 8명(35%)이 속해 있다. 앞서 언급한 “의료-행정”에 속한 이들을 제외하고, 행정 관료인 동시에 사회공학자(행정-공학)인 인물로는 김학묵과 정준이 있다. 행정 관료 집단에 속한 전체 인사들은 아동 청소년 범죄, 가정법원에 배당되는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법조계 출신(이한규, 권순영)과 보건사회부 소속의 정무공무원(김용성, 김학묵, 윤석우, 윤유선, 이종진, 정준)으로 구분된다. 보사부 출신의 사람들은 구호과장, 방역과장, 만성병과장, 보건과장, 의정국장, 보건사회위원장과 같은 직책을 맡아 전반적인 보건행정 개편 및 정책 수립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2】 직군에 따른 가족계획협회 인사 분류: 행정 관료

	소속 인사		관심 분야
행정	김용성, 김학목, 권순영, 윤석우, 윤유선, 이종진, 이한규, 정준		아동청소년 범죄, 아동복지, 가정법률, 보건행정, 보건정책, 사회복지
	법조인	권순영, 이한규	
	보사부 공무원	나머지 6인	
행정-의료	윤석우, 윤유선, 이종진		(공중보건) 만성병, 방역위생
행정-공학	김학목, 정준		(사회복지) 아동복지, 농촌보육, 복지사업

마지막으로 사회공학자 집단은 김학목·류달영·오천혜·이영춘·정준·지종상·최성율·하상락으로 8명(35%)이 있다. “의료-공학”에 속한 이영춘, “행정-공학”에 속한 김학목, 정준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각기 사회복지사업, 가족계획사업, 농촌계몽운동에 주력하며 저마다의 사회공학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표3】 직군에 따른 가족계획협회 인사 분류: 사회공학자

	소속 인사		관심 분야
공학	김학목, 류달영, 오천혜, 이영춘, 지종상, 정준, 최성율, 하상락		사회복지사업, 가족계획사업, 농촌계몽운동
공학-의료	이영춘		(공중보건) 농촌보건위생
공학-행정	김학목, 정준		(사회복지) 아동복지, 농촌보육, 복지사업

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인사는 직군에 따른 분류 외에도 **접촉 국가**로도 세분화할 수 있다. 문헌 상에 공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사들의 학력과 이력을 바탕으로 23명 중 12명의 인사들을 미국, 일본, 북유럽⁷²⁾ 국가들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⁷³⁾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김용성, 김학묵, 류달영, 박재빈, 신한수, 양재모, 오천혜, 윤석우, 윤유선, 이종진, 하상락까지 전체 12명 중 11명이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 미국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와 미국 유관 기관 및 조직에서 근무한 경우로 다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미시건, 미네소타, UC버클리, 존스홉킨스, 예일 등의 대학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 사회사업, 보건학, 원예학, 의학 등의 학문을 연구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UNCACK, WHO, 미군정, UN민사원조사령부, PC 등에서 국외 본부에 파견되거나 국내 지부에 근무하며 해외 인력들과 교류했다.

한국 보건행정 및 의료 인력의 기반이 일본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일본과의 접촉 역시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학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강주심, 신한수, 이종진, 하상락 위 4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일본중앙대학 법학부 출신이다. 도쿄여자의전을 졸업한 뒤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한 강주심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일본에서 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 대학원에 진학했다. 신한수와 하상락은 미국 유관기관에서 가족계획, 사회사업 계통 업무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험을 통해 일본식 체계에서 미국식 체계로의 변화를 꾀할 계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특기할 만한 예로 북유럽권 국가가 있다. 류달영, 윤유선, 이종진은 국외 유학과 국외 유관기관 및 인사들

72) 스칸디나비아 3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해당된다.

73) 강주심, 김용성, 김학묵, 류달영, 박재빈, 신한수, 양재모, 오천혜, 윤석우, 윤유선, 이종진, 하상락 이하 12인.

과의 교류를 모두 경험했다. 류달영은 고교 시절부터 농촌계몽과 청년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치무라 간조의 저서 『덴마크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국내에 덴마크식 모델을 적용한 국민재건운동을 전개했다.⁷⁴⁾ 윤유선과 이종진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스웨덴과의 연결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진은 1958년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약 3개월간 스칸디나비아 3개국 시찰을 다녀왔다. 윤유선은 1964년 동 의료원 4대 원장으로 취임해, 스웨덴 의료진들이 철수하기 전까지 그들과 교류하며 북유럽식 의료인 교육시스템 및 의료 체제를 흡수했다.

【표4】 접촉 국가에 따른 가족계획협회 인사 분류

	소속 인사	
미국	김용성, 김학목, 류달영, 박재빈, 신한수, 양재모, 오천혜, 윤석우, 윤유선, 이종진, 하상락	
일본	강주심, 신한수, 이종진, 하상락	
북유럽	류달영, 윤유선, 이종진	
	덴마크	류달영
	스웨덴	윤유선, 이종진

이렇게 가족계획협회를 구성하는 인사들을 직군과 접촉 국가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위의 분석을 통해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직군에 따른 분석에서 가족계획협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의학적인 고려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공학자 및 행정 관료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순수하게 의사와 간호사 직무만 행한 사람이 9명, “의료-행정” 혹은 “의료-공학”을 겸한 사람과 사회공학자 및 행정 관료를 더한 사람의 수는 14명으로 순수 의료진의 절반 이상에 해당했다. 즉 인

74) 국민재건운동은 농촌계몽과 생활개선의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활동이었다.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2017, 느티나무책방), 131~143쪽.

사들의 직군만 고려한다면, 가족계획협회의 이름에서 가족계획을 표방한 것과는 달리 공공보건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물론 이 시기에는 가족계획과 가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았고, 가족계획 분야의 전문가 부재, 이론적 기반의 미비와 같은 난점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우선 행정·사회공학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인사들로 하여금 가족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토대를 다지고, 이후 60~70년대의 행보에서 의료진들이 가족계획의 실천적인 면모를 부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⁷⁵⁾

또한 가족계획협회 인사들이 접촉한 국가들을 통해 얻어낸 결론은 가족계획협회가 글로벌한 맥락이 두드러지는 단체였다는 점이다. 국외대학(원)생과 도미유학생이 8명, 해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자가 7명, 외부 인사와 지속적인 교분을 다진 사람이 3명으로, 접촉 경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접촉 국가 역시 미국, 일본, 북유럽으로 고루 퍼져 있었다. 따라서 가족계획협회가 수립한 가족계획에는 교육, 경영, 행정적 분야를 아우르는 일본식·미국식·북구식 모델이 융합되었다. 일본식 모델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도미유학생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전까지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의 지적·물적 지식의 토대로 작동했다. 일본식 교육 및 행정체계, 사법제도가 개편되었고, 유교 중심의 가부장적 관습이 “발명” 되었다. 일본의 모델은 점차 미국식 모델로 이양되었다. 미군정과 6·25전쟁 시기를 거치며 사회망 내부와 학문 분과에 새로운 인

75) 한국의 가족계획은 박정희 재임기 동안 사회과학의 발달과 국제 협력을 통해 농촌 생활을 진보시킨 서사라고 특징지어지곤 한다. DiMoia는 최근의 연구에서 가족계획의 서사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밝힌다. 한국전쟁기(1937~1945)는 식민과 탈식민의 느슨한 교차지점으로써 관료, 사회과학자, 계획가 등이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스템과 미국의 사회과학 시스템 양자를 수용 및 변용했다고 설명한다. 즉 DiMoia는 한국 가족계획의 설계자들이 일본 혹은 미국의 인구 담론을 체화함으로써 가족계획의 당위를 획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달리 본고는 가족계획의 설계자로 대표되는 협회 인사들의 이력만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공보건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적인 실천 동기라고 판단했다. 동기가 무엇일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이지만, 사회조사사업을 비롯한 공공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의료체계의 전문화로 나아가 의료보건체계가 완성되는 과정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한 DiMoia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John P.DiMoia. "Revisiting Korean Family Planning(FP): Population and the pre-1962 Context" *Korea Journal*, vol. 62, no. 3(2022).

력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도미 유학과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미국식 모델을 흡수했고, 한국의 보건의료계 및 사회과학계의 기틀이 세워졌다. 북구식 모델은 특히 전쟁기에 파견된 군대와 의료집단을 통해 보건의료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본-미국-북구의 세 모델이 시기를 거치며 점차적으로 융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통합적인 특성은 가족계획협회가 국내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적인 모델을 자유롭게 도입해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북유럽-스칸디나비아 3국과의 접점은 한국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던 미국·일본에 비해 특이한 사례로 비춰진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의료구호단을 파견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의 건립을 위해 의료진 파견·의료 장비 및 시설비로 200만 달러를, 의료원 운영비로 5년간 매년 최대 150만 달러를 공동 부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건립은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7년간 투입한 총 소요 경비가 269만 달러였는데, 그만큼의 돈이 병원 건물 공사에만 전부 투입되고도 모자랄 정도로” 당시로서는 초거대 국책사업에 해당했다.⁷⁶⁾ 이로써 미국식·북유럽식 의료 체계와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에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⁷⁷⁾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에서도 스웨덴은 더욱 눈여겨 볼 만 하다. 앞서 지적했듯 스웨덴은 글로벌한 양태의 인구 담론을 발전시킨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의

76) “1956년 3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정부는 유엔 한국재건단 및 한국 정부와 교섭을 거쳐 국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공동 협의에 돌입하여, 1956년 3월 13일, 삼자 간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63년사: 1958-202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2021). 70~74쪽.

77) 스칸디나비아 3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약 5000명의 의료구호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UNKRA(유엔한국재건단)와 함께 국립의료원을 세웠다. UNKRA가 시설 건축자금 240만 달러, 스칸디나비아 3국이 병원 의료진 80명 파견과 더불어 기자재 마련에 최대 200만 달러, 운영비로 150만 달러를 매년 지급하였다. 이러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건립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책 사업으로, 공사비에만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7년간 투입한 소요경비를 뛰어넘는 초거대 사업이었다. Ibid.; 1958년 국립중앙의료원이 건립된 지 10년인 1968년 9월 30일을 끝으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진들이 철수하였다. 10년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의료진들은 선진 의료 시스템 및 기술과 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 철수 이후에는 한국이 전적으로 운영을 맡으며, 초대 원장에 이종진 박사가 취임했다. 이박사는 스칸디나비아 3국에 3개월 간의 시찰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이종진. “(254)메디컬센터” 『중앙일보』 1968년 10월 3일자.

인구 담론에도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에른스트 마이클(Ernst Michanek), 엘리스 오테센 쟈슨(Elise Ottesen-Jensen)⁷⁸⁾, 잉가 토르손(Inga Thorson), 울라 린드스트롬(Ulla Lindstrom), 알바 뤼르달(Alva Myrdal)⁷⁹⁾, 인구 통계학자인 하네스 히레니우스(Hannes Hyrenius),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itutet)의 산부인과 교수 울프 보렐(Ulf Borell), 통계학자인 스텐 왈룬드(Sten Wahllund), 의학 고문 말콤 토티(Malcolm Tottie) 등과 더불어 스웨덴의 정당 역시 인구·가족계획 문제에 대한 국제 정책 및 전략 개발에 몰두했다. UN의 인구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에 인구 개발과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도 바로 스웨덴이었다.⁸⁰⁾ 이러한 스웨덴의 면모를 부각하는 단체인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청(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인구정책과 여성 중심의 가족계획(Family Planning)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⁸¹⁾ SIDA는 가족계획사업을 계기로 한국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1965년 5월

78) Elise Ottesen Jensen은 스웨덴의 성교육자이자 사회복지사로 성교육, 피임 및 낙태 합법화 법안을 위해 투쟁한 인물이다. 1933년 RFSU(Riksförbundet för Sexuell Upplysning :the Swedish Association for Sexuality Education)를 설립해 1959년까지 이끌었다. 그는 1953년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결성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는데, 1959년부터 1963년까지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의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1941년 미혼모를 위한 집, "Ottar-gården"을 짓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1942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학교 교과목에 성교육을 도입하는 등 인구 문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그가 창립한 RFSU는 낙태와 피임, 학교에서 성교육, 동성애 비범죄화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콘돔, 탐폰, 가정용 임신 테스트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며 그 수익을 다시 사람들의 삶의 개선하기 위한 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RFSU는 SIDA의 개발조직(framework)으로써 국가 정책 및 전세계의 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9) 1958년 실론(스리랑카)에서의 개발 지원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

80) 스웨덴은 약 20개국을 지원하며, NGO, IPPF, PC와 구매 협약을 맺어 빈곤국에 피임약을 제공했고, 피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IPPF와 NGO를 지원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한 스웨덴은 1974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인구회의와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후속 회의의 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미국 상원은 1966년 모성과 양육 영역에서 스웨덴의 실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SIDA를 초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HIV가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현장과 연구실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SIDA가 첫 번째 후원자를 자처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s://fuf.se/en/magasin/befolkningspolitik-och-familjeplanering-inom-svenskt-utvecklingsamarbete/>, accessed 2023.4.12.

81) 세계빈곤 감소를 사명으로 승웨덴 의회 및 정부에 의해 지정된 원조집행기관으로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IPPF 서태평양 지역 컨퍼런스에 스웨덴(당시 서전) 국제개발처장 어니스트 믹넥(Ernest Mickneck)이 보건사회부와 접촉해 기술원조에 대한 의견을 내보였다.⁸²⁾ 한국과 협약을 맺은 SIDA는 가족계획사업을 지원하였는데,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설립 및 각종 설비와 약제가 제공되었고, 『가정의 벗』 역시 제지 지원을 받았다.⁸³⁾ 이처럼 스웨덴-SIDA와의 연결점은 국제적인 인구 담론의 흐름에 수용됨과 동시에 가족계획사업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차원의 인구 담론 전파 양상을 드러내고, SIDA의 개입은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강조하는 복구식 가족계획 모델의 투입을 암시하기도 했다.⁸⁴⁾

인구 담론을 둘러싼 다양한 지적·물적 토대는 한국에서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가족의 모형을 정립하려는 가족 담론이라는 영역으로 좁

경에 현재의 명칭으로 굳어졌다. 손옥 외 4인. 「제3절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2015). 한국개발연구원, 55~75쪽.; SIDA는 1952년 에티오피아와 파키스탄에서 스웨덴의 운동권 조직이 첫 원조사업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62년에는 개발원조 관련법이 통과되었고, 1965년 동기관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 스웨덴의 원조는 학교, 병원, 공장 등의 시설 건립에 집중되었는데, 197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컨퍼런스를 계기로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82) 국가기록원, “가족계획에 관한 스웨덴 기술원조 요청”,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국 외교사료과 (1967), CA0005781, 4쪽.

83) SIDA의 한국 가족계획사업 지원과 관련한 협약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다음의 문서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 “SIDA의 한국가족계획사업 원조요청경위”(1967), CA0005781,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국 외교사료과.; 1970년 7월 개소한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설립 역시 SIDA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는 국내 각급 가족계획 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해 기초 교육 및 보수 교육의 정규 훈련 과정을 설정하고, 각 분야의 대학 교수와 정책 참여자 50여명으로 강사진을 편성했다. 동시에 실습 및 견학을 위하여 수개 기관과 위탁 교육관계를 수립하였다. 외국 가족계획 및 인구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훈련 및 견학 과정을 설정하여, 방문자에 대한 안내와 소개를 통해 국제간의 유대를 두터이한 바 있다.; “(중략) Reference is made to your letter of August 19, 1969 with a request for assistance in the field of family planning./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Swedish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amily planning, SIDA is willing to deliver commodities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fiscal year 1968/69 as follows. “*Swedish Grant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me of the Republic of Korea*”(October 1, 1968).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Rockefeller Archive Center.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스웨덴의 원조 내역은 경구 피임약, 차량, 랜드로버 여부분 부품, 중이다. 상세 내역은 본문 뒷면의 부록을 참조.

84) SIDA의 개입을 계기로 오히려 한국의 국가형 가족계획사업이 가속화되었다.

혀졌다. 이 영역에서 각기 다른 분야에 주력한 전문가 집단이 가족계획협회라는 구심점을 통해 한데 모여들었다. 상이한 배경의 상이한 조건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가족계획협회는 가족에 대한 지향점도 각기 달랐다. 따라서 저마다의 지향점을 수렴하는 “가족계획”이 함유하는 바는 중층적일 수밖에 없었다. 각 집단은 고정된 “가족”의 의미가 존재했고, 가족계획협회는 전체 집단으로서는 “가족”의 의미가 미정으로 존재했다. 개별적인 “가족”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율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족계획협회의 초기 구성원들에게 “가족”은 정적인 결과값인 동시에 동적인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층적인 “가족”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족계획협회의 활동을 3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활동은 크게 조사·연구, 정책·자문, 교육·홍보로 구별된다.

먼저 조사·연구 활동의 경우 가족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범조사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PC(Population Council, 미국 인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 예방의학 교실의 양재모·방숙 교수 연구팀이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에서 시행한 가족계획 연구와 서울대 의대 권이혁 교수 연구팀이 서울 성동구에서 실시한 도시형 가족계획사업 연구를 들 수 있다. 양재모·방숙 연구팀은 조사 사업을 통해 IUD(자궁내막장치) 시술 사례 2,905 건을 확보해, IUD 시술의 문제점에 따른 낮은 참여 현황을 발견하고, 먹는 피임약을 대안으로 도입하였다. 다만 피임약의 섭취 주기 확인용지를 통해 피임약 섭취 주기에 대한 재안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더불어 어머니회와 같은 집단이 공식적인 조사 집단보다 정보 조사 작업(가임연령, 피임시술 희망 여부 등)에 적합하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얻었다.⁸⁵⁾ 권이혁 교수팀은 1964년 6월

85)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10. Folder 1056.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r. Jae Mo Yang: Koyang Family Planning Study. Rockefeller Archive Center.

동안 4명의 의사들과 성동구 보건소에서 가임기 여성 3,204명을 대상으로 출산 관련 상황, 다양한 피임방법의 효과 등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루프 삽입시술을 시행하였다.⁸⁶⁾

이러한 조사 작업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가족계획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내에서는 1965년 5월 서울에서 IPPF(국제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 지역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한국, 대만, 일본, 홍콩의 가족계획 실무자들이 모여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발표하고, 여러 정책을 논의하였다.⁸⁷⁾ 컨퍼런스의 자세한 발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5】 IPPF 서태평양 지역 컨퍼런스 발표 주제 및 연사⁸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년 국가의 가족계획에 관한 시범연구결과>, 양재모(한국가족계획협회장) • <자궁내막장치의 의학적 연구결과>, 신한수(서울대 산부인과 교수) • <지방(고양군) 인구 통제 연구>, 김명호(고양군 보건소장) • <도심(서울) 인구 통제 연구>, 권이혁(서울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수) • <정관절제수술 연구>, 이희영(서울대 비뇨기과 교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와 국가발전의 문제>, 미노루 타치(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문제청장) • <리퍼스 루프와 오타링 간의 비교 의학연구>, 세이치 마츠모토(군마대 산부인과 교수) • <배란 인지 시 이외의 기초 체온과 측정 온도의 관계>, 히로시 오기노(국가 공공보건기구 가족계획부)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완의 가족계획건강 프로그램-발전, 조직 그리고 수립>, Hus Shu-Chi (지방재건 미중공동위원회 농촌보건부장)

86)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8. Folder 1035.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Urban Project Reports. Rockefeller Archive Center.

87) 이 학술대회에서 스웨덴 정부 인사가 접촉해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원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68년 7월 12일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88)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5. Folder 1014. Rockefeller Archive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공중보건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들>, Laura Lu(타이완 보건분과 건강교육부서장)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에서 자궁내막장치의 일년간의 결과물>, Daphne Chun(홍콩 가족계획 협회장) • <홍콩 가족계획교육의 몇몇 특수한 문제점들>, Ruth Kirby(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지역 의회 부의장) • <가족계획협회 활동 보고>, Peggy Lam(홍콩 가족계획협회 사무국장)

가족계획협회는 정책 및 자문 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하였다. 가족계획의 실무 전반을 반관반민 기구였던 가족계획협회가 도맡아오다가 1963년 말부터 점차 보건사회부 모자보건과와 연구소가 그 역할을 이양받았다. 가족계획 지도원의 양성과 모자보건법의 제정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가족계획 지도원의 양성에 대한 책무가 연구소 측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가족계획협회는 전국 189개 보건소에 가족계획 지도원을 배치해 계몽지도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계획 실천요강”을 배포하였다.⁸⁹⁾ 가족계획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의 제정에도 힘을 보태었다. 1970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가족계획협회는 모자보건법의 수용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동월 23일 기자회견을 마련해 IPPF 의학국장 말콘·포트 박사로 하여금 모자보건법의 시행을 서둘러야 함을 강조했다.⁹⁰⁾ 그리고 1973년 5월 28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모자보건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 밖에도 인구 증가의 방책으로 집단 이민과 해외 입양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⁹¹⁾

89) 약 10여년 간 가족계획 요원들의 국내 훈련은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국립보건연구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및 각 시·도 등에 위임 실시되었으나 가족계획연구소가 1970년 8월 10일 개소함에 따라 당연구소에서 가족계획 요원의 훈련을 맡아 440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보(창간호)』 2쪽.; 국립가족계획연구소(1970~71)는 이후 가족계획연구소(1971~81), 한국보건개발연구원(1976~81),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1~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현재)로 개칭되었다.

90) “인구폭발 막는 모자보건법” 『경향신문』 1970년 10월 28일자.

91) 1961년 최고회의특위는 가족계획에 1억 5천만환을 책정했고, 이 중 고아 위탁양육과 입양 등의 구호대책이 인구증가에 따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써 동예산의 혜택을 받았다. “가족계획

마지막으로 가족계획협회는 조사 및 연구, 정책 자문 외에도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선전, 교재·팸플릿·잡지 등과 같은 책자 발행 및 배포, 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가족계획 어머니회, 이동시술반, 가족계획계몽원과 같은 하부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에게 가족계획을 쉽게 설득하기 위한 드라마 및 광고 캠페인이 대중매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일례로 1960~67년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6분 10초 분량의 흑백 영상인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Family Planning)”가 있다. 김혜정, 이대엽 등 당대의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하였는데, 내용은 두 부부가 첫 아이를 낳고 가족계획 지도원을 만나 출산 직후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듣지만 결국 입덧을 하는 아내를 보며 당황한 남편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⁹²⁾ 1972년 6월 24일부터 10월까지 중앙방송국에서 30회차로 방영된 가족계획 계몽 라디오 드라마 “사랑의 자매”도 있다. 본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문화방송의 인기 프로인 <부부만세>에 “딸 여섯”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들날기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⁹³⁾ 제작 지원 외에도 실제로 가족계획 TV드라마공모 대회를 개최해 직접 작품을 발굴하는 등 대중 호소 전략에 골몰하였다.⁹⁴⁾

교육 및 홍보 활동에는 흥미를 유발하는 시청각 외에도 기본적인 안내서 용도의 팸플릿과 공무원·지도요원·학생들을 위한 교재, 대중 교육과 재미 측면

에 일역오천만환” 『조선일보』 1961년 12월 19일자.; “인구팽창과 이민” 『동아일보』 1961년 11월 24일자 조간 4면.

92)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Family Planning)”(1960년대 추정) RG 306 8699. 미국 NARA 소장 주한 미국공보원 영상자료.; 당시의 가족계획 구호가 제목에 그대로 차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 지도원의 활동과 교육을 담당하는 큰 축이 가족계획협회였음을 고려할 때 영상에 들어간 가족계획 지도원의 내용은 본 영상이 공보부 영화과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협회에서도 일정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93) 『가정의 벗』 1972년 9월호의 <협회 안팎 소식>에 따르면, 협회가 중앙방송국의 협조를 얻어 가족계획실천을 촉구하는 연속극을 방영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가정의 벗』 제5권 9호(1972년 9월호) p.37.

94)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진으로 보는 50년』, 인구보건복지협회, p. 173.

모두를 고려한 잡지 등의 인쇄매체가 활용되었다. 산간벽지 지역민과 도시 빈민의 경우,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보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몽의 효용이 떨어졌다. 대신 인쇄매체는 보건소, 진료소처럼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 배포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그 효용이 컸다. 가족계획협회는 IPPF의 지원으로 전국 보건소 안내용 팸플릿 210종을 240만매 제작하여 전국의 각 보건소와 협회 부속의원에 발송하였다.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월간지 『가정의 벗 *Happy home*』을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1968년 발간된 이래로 매달 약 45,000부를 배부하였고, 후에 SIDA의 지원을 받아 1973년부터 월 1,000부씩, 60,000부로 증간해 산간벽지의 주민들의 가족계획 보급에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가정보건 계몽도보』, 『사랑의 성교육』⁹⁵⁾, 『유아 성교육 동화집: 그건 비밀이야』, 『내일을 위한 설계』, 『가족계획자습교본』, 『경제개발과 가족계획』⁹⁶⁾ 등의 여러 교재를 발행하였다. 이 밖에도 담배갑, 우표, 은행통장 등에도 가족계획 표어가 인쇄되는 등 일상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노출 빈도를 늘리거나 작가들의 가족계획사업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작가세미나를 개최해 가족계획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는 시도를 하였다.⁹⁷⁾

대중매체, 인쇄매체를 이어 사람이 직접 가교가 되어 가족계획사업을 진흥시킨 대표적인 세 단체도 있다. 먼저 가족계획 어머니회는 1968년 먹는 피임약의 지역 보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16,923개 마을에서 조직되었다. 가족계획 어머니회는 가족계획에 관한 실천지도 및 계몽권장, 가임여성조사, 먹는 피임약 복용자 및 대상자와 희망자 조사, 루프 대상자 및 탈락자 조사, 어머니회비 저축을 통한 마을(구락) 개선사업 시행을 하며, 가족계획사업뿐만 아니라 국민재건운동의 수행자 역할을 담당하였다.⁹⁸⁾

95) 우리나라 최초의 성교육 종합 지침서이다. 가족계획협회에서 발간한 비매품으로 구독회비는 월 2천원이다. 『가정의 벗』 제5권 8호(1972년 8월호) p.17.

96) 향토예비군 및 공무원 계몽자료로 활용되었다. Ibid., 37쪽.

97)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진으로 보는 50년』, 인구보건복지협회, 165~170쪽.

98) “인구통제: 미국 국제개발처 자료로 본 가족계획사업” 국가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archive.history.go.kr/reference/view.do?id=13>,

가족계획사업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환하고 국민 각자가 자기 가정에서부터 가족 계획의 실천을 생활화해 나가기 위한 조직화 작업으로 1968년에 전국 군지역 범 정리동 단위에 조직한 가족계획 어머니회는 “가족계획”이란 현실적인 이름과 명분을 자각하여 본 사업추진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들 자신의 생활향상은 물론 퇴폐적인 농촌인습의 개선, 낙후한 고장의 발전 등 지역사회 개발에까지 적극 참여하여 왔다.⁹⁹⁾

이동시술반(mobile clinic)은 USAID(국제개발처)의 자금으로 제공된 10대의 미군 차량을 개조하여 전국을 도는 것이 시작이었다. 이동시술반은 의료진과 계몽원이 함께 탑승해, 각 지역을 돌며 가족계획을 홍보하고 시술 희망자에게 설비가 갖추어진 시술차량에서 시술 및 투약 처치를 즉석에서 제공해주었다.¹⁰⁰⁾

가족계획사업의 1차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요원, 가족계획 계몽원(가족계획 지도요원)은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실시된 때부터 1980년대 후반 굳이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에 다다르기까지 가족계획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당시 계몽원으로 활동한 백순희씨의 구술 기록을 통해서 그 실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백순희씨에 따르면, 계몽원은 협회에서 제공한 일주일 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뒤, 아이가 많은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루프 시술을 권유하는 일을 했다.¹⁰¹⁾

accessed 2023.9.8.); 국민재건운동은 새마을운동의 전신으로써 농촌생활개선운동이었다.

99)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어머니회 운영요강』 『가정의 벗』 제4권 4호(1971년 4월호) 35쪽.

100) “인구통제: 미국 국제개발처 자료로 본 가족계획사업” 국가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가족계획 기동타격대...이동홍보반” 『동아일보』 1972년 5월 5일자 5면.; “서울 시내 변두리 지역 및 촌벽지역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계몽선전을 벌이고 있는 협회 이동홍보차량은 지난 5월 강원도 영월군내 7개 광산지역에서 9,700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계몽을 실시했는데 이 계몽결과 현지 보건소의 시술 실적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이 증가되어 분기 내 목표를 5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다.” 이동 시술차량 외에도 이동홍보차량이 활동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벗』 제5권 7호(1972년 7월호) 37쪽.

101) 국사편찬위원회. 「진정한 농민의 협동조합을 위하여(1950년대 이후 이천지역 농민조합운동)/가족계획에 헌신하다(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협회 계몽원의 활동)」. 『구술사료선집 2』 (2005).

그 당시에는 일을 어떻게 했냐하면, 협회에 있을 때는 버스를 타고 나가요. 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마이크를 좀 빌려달라고 해요 ... 공문도 한번씩 띄우고, 일주일에 한번씩 마이크를 빌려 달라고 해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 가족계획협회에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지금 임신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무료로 유산해 드립니다. 한번 나오셔서 상담하시고 루프, 먹는 약, 복강경 원하시는 분, 정관수술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모셔가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102)

60년대에는 인구 감소에 초점을 두어 루프 시술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루프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며 참여율이 낮아지자, 상계동에 클리닉을 개소했다. 이 클리닉은 IPPF의 지원을 받아 피임약이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거기서는 이제 피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계획, 가족계획을 하나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DPT¹⁰³⁾, 소아마비, 이런 예방접종까지 겸해서 했어요.” 104)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당시 여성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빈민이 밀집해 있던 청량리, 성남 등지에도 이와 같은 클리닉이 설립되었다. 계몽요원들은 클리닉에 근무하는 시간 외에도 해군 홍보선에 탑승하거나 예비군 훈련장에 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족계획사업을 위해 헌신하였다.

3장에서는 가족계획협회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가족계획으로의 전환, 그리고 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인사와 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열전과 냉전의 격전지이자 인구 담론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국가의 통제 범주를 넘어선 인구의 팽창은 경제와 사회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등장하게 된다. 본 단체는 반관반민의 기구로써 글로벌한 다양성과 공공성¹⁰⁵⁾이

102) Ibid., 280쪽.

103)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

104) Ibid., 275쪽.

라는 특성을 지녔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 홍보, 정책 등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가족계획을 실천해나갔다. 이를 통해 가족계획협회가 당시에 정의하고자 했던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가족계획협회의 창립 초창기에는 공통의 “가족”에 대한 명확한 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족계획은 연 4%를 상회하는 인구 증가율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둔 국가 발전 계획 사업의 일부였다. 하지만 인구를 줄인다는 것에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했다. 공공보건체계의 구축, 국가 통계작업의 완성,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보장제도 및 법적 자구책의 마련, 막대한 재정 원조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빚어지는 대규모의 사업이었다. 가족계획사업은 이러한 사업적 기반이 뒷받침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계획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선, 공통된 가족계획과 가족에 대한 합일된 상이 필요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산아제한 표어인 “덜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인구 증가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가정의 빈곤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으니 가정에서 자생·자육·자활·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가족계획협회가 발족하고,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된 지 10년 차에 해당하는 1971년 『가정의 빛』 2·3월호에는 이런 말이 실려있다. “한 가정의 빛은 곧 사회의 희망이며 그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빛이기도 합니다.” 이는 가족을 계획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국가·사회·마을이 잘 살 수 있는 양질의, 그리고 적합한 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1960~70년대 가족계획협회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가족계획”이었다.

따라서 가족계획을 통해 구축된 “가족”의 상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맥락

105) 공공의료망의 구축

에서 발전주의와 조응하는 것이었다. 농가에서 가족계획과 동시에 국민재건운동(새마을운동)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에는 가족계획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이 노동 건전성이 떨어지는 인구의 수적 증가를 막음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완화하고, 개별 인구의 역량은 높이는 한편 가족계획을 위해 구성되는 부녀회 조직이 마을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 전체로 그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은 개별이 모여 일가를 구성하는 사적 공동체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지탱하는 최하부조직으로써의 공적 공동체를 의미했다.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가족(자녀)의 수는 3명, 2명, 1명으로 달라지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신체강건한 자녀와 전통적인 규범·빈곤에서 벗어난 계몽된 의식을 가진 가정주부로서의 어머니, 그리고 생계부양자인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중심축으로서의 아버지라는 근대적 핵가족의 이미지가 바로 이 시기에 행복한 정상 가족의 표본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Ⅳ. 『가정의 벗』 과 한국에서의 인구학적 실천

반관반민 단체인 가족계획협회는 가족을 계획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적 질서에 조용하는 전(前) 정치적 범주로서의 이상화된 가족 모형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기관지인 『가정의 벗 *Happy Home*』은 그러한 가족의 이상을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함으로써 국가와 기관의 확성기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보 매체였다. 이번 장에서는 가족계획협회의 기관지이자 가족계획 전파 매개로서의 『가정의 벗』에 주목한다.

『가정의 벗』은 가족계획협회에서 1968년 8월 농촌 가정의 근대화 및 농촌 여성의 계몽을 위해 발간한 기관지이자 월간지이다.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점차 그 외연이 확대되어 “우리 가정의 근대화”,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게 된다. 발행인에 가족계획협회 이사 양재모, 편집인에 초대 국립의료원장이자 가족계획협회 이사장 이종진, 인쇄는 이준기가 맡았다. 편집 자문 위원에는 각 호마다 차이가 있지만 70년대에는 대체로 여성지 편집자, 미공보원 공보고문,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담당관, 언론·출판 관계자, 아동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 매달 42,000부씩 발행¹⁰⁶⁾ 및 배포되며, 보급가격은 50원(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3,000원), 구독회비는 6개월분에 100원, 1년분에 200원이다. 다만 일반 판매용으로 시중의 서점에서 유통되지는 않고, 각 지역의 보건소나 가족계획어머니회, 가족계획 계몽 요원을 통해서 배부되는 형식으로 보급되었다.¹⁰⁷⁾

106) 동아일보사에서 1967년 발행한 『여성동아』는 B5판 크기에 평균 면수는 1,000페이지, 평균 발행 부수 12만 5천부에 해당했다. 학원사에서 1965년 발행한 『주부생활』은 B5판 크기에, 480면 분량으로 1970년대에는 판매부수가 20만 부에 육박했다. 1960년대 당시 대형 언론사를 뒤에 업은 잡지들의 평균 판매 부수가 15만 부 정도인 것으로 볼 때, 군소 언론에 해당하는 『가정의 벗』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이 명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대중지가 아님에도 4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것은 당시 실제 독자층이 이보다 더 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107) 별도로 구독을 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대한가족계획협회지도부 『가정의 벗』 편집실로 송료를 선지급하면 희망 부수대로 송부해주었다.

『가정의 벗』은 가족계획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인 동시에 가족계획의 대중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계획협회는 연구, 자문, 홍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활동을 수용하고, 가족계획을 체화하는 주체들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전통적 인습의 잔존, 지역과 빈부에 따른 정보 격차, 공공보건망의 접근 한계성으로 인해 산간벽지에 위치한 지역민과 도시 빈민은 가족계획의 실천에 있어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었다.¹⁰⁸⁾ 1969년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가족계획 계몽원으로 방문한 김선옥씨의 수기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은 피임도구에 대해 알려주는 그를 보고 풍선장수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어 가족계획에 대해 권유하면 “나사 딸만 넷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예 싸리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¹⁰⁹⁾ 가족계획의 대중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관계자들로서는 농촌 가정의 계몽이 시급한데 반해 현실은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 대중의 정서에 호소함과 동시에 정보의 각인효과가 큰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전략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청각 매체가 가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 수준은 떨어졌다. 1950~70년대 농촌 가정의 경우, 각 세대별로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가전기기의 보급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 않았고, 계몽용 영상물을 상영할 만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¹¹⁰⁾ 시청

108) “가족계획 제2차 10년’의 첫 해인 지금 ‘두 자녀 가족’은 아직까지도 대도시에서까지 희소가치로서의 존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특집/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오늘과 내일: 내 이웃을 내집같이 돌보는 어머니회가 되자」 『가정의 벗』 제5권8호(1969년 1월호). 8~9쪽 ; “신영자: 인습에 대한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저희 충청도에서는 아직도 양반 기질이 남아 있어서 혈통 문제를 중요히 다루고 있어 사실상 마음은 있는데 마을 어른들 등 주위의 눈 때문에 선뜻 실천을 하지 못하는 등 가족계획보급이 힘든 고충이 있습니다” “신영자: 그것은 수준이 높은 도회지 사람들이야 수궁이 될지 모르지만, 수준이 낮은 시골 농촌에서는 아직도 아들에 한해서만 노후의 부양 의뢰를 하는 셈이죠. 특히 노동력 때문에 아들 우위사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정의 벗 창간 4주년 기념 좌담회: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어머니회가 나아갈 길」 『가정의 벗』 제5권8호(1969년 1월호). 21쪽.

109) 대한가족계획협회.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정의 벗』 제2권1호(1972년 8월호). 31쪽.

각 매체가 지닌 한계로, 신문, 광고지, 서적,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특히 잡지는 대중의 흥미를 자아내고 선별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오락성과 전문성을 모두 포함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잡지의 영향력은 시대적 상황과도 맞아떨어졌다. 1950년~1960년대는 한국 언론계에 있어 특기할만한 분기점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부산, 대구에 창간되었던 군소 잡지들이 수복과 함께 서울로 발행지를 옮기며 엄청난 양의 잡지들이 생산되었다. 전문 잡지 경영인들이 등장하고, 한국 언론이 기업화되며, 경영다각화의 방책으로 잡지 발행이 대거 늘어난 것과는 맞물린다. 종합교양지 『사상계』, 학생잡지 『학원』, 개신교잡지 『새가정』 등 1,400여 종에 이르는 잡지들이 발간되었고, 여성 잡지 역시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리며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정의 벗』은 대중지이자 특수지로서의 성격을 갖춘 잡지로서 당시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현실을 반영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¹¹¹⁾

이렇게 가족계획사업을 투영하고 있는 전파 매개로서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가정의 벗』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110) 최초의 국산 라디오가 1959년 락회화학(현 LG전자)에서 약 2만 원의 가격으로 등장했다. 국산 라디오는 초기에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62년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통해 전국의 농어촌으로 확산되었고, 운동 시작 1년 만에 라디오 보급량이 13만 대로 늘었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흑백 텔레비전이 1966년 8월 등장했다. 당시 텔레비전의 가격은 6만 8천 원 정도로 회사원의 1년치 연봉과 맞먹었지만 수요가 엄청나 공개 추첨을 통해 판매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1950~70년대 농촌 가정의 가전기기 보급률은 여전히 도시와 비교해 높지 않았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통해 라디오의 수요가 높아지긴 했지만, 시골 지역에는 가전기기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더 많았다. 상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를 참고(<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appliances.do>, accessed 2023.10.11.)

111) 『가정의 벗』을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가족계획 어머니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해당 잡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돌려읽는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의 때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학습 또는 토의한다. (가) 어머니교실 운영: 가족계획의 생활화를 위한 연구 토론 및 어머니들의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 ③교재: ‘가정의 벗’을 주교재로 하고 당회에서 수시로 발행 배부하는 책자 및 유인물을 부교재로 한다.”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어머니회 운영요강」 『가정의 벗』 제4권 4호(1971년 4월호) p.35~36.; 이용성. 『20권 광고, 시대를 읽다』 한국문화사.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view.do?levelId=km_020_0030_0060_0010, accessed 2023.11.10.)

『가정의 벗』을 발행 및 편집에 관련된 인물 측면과 표지, 광고, 기사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실증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의 벗』의 편집진은 대체로 여성지 편집자, 미공보원 공보고문,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담당관, 언론·출판 관계자, 아동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이 주 독자층이며 농촌 가정의 가족계획이 주내용인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지 편집자와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담당관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미공보원 공보고문 역시 『가정의 벗』 발행에 미국 측 외원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상당하고, 인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인 점을 생각한다면 편집진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여진다. 이와 별개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과 언론·출판 관계자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주목해볼 만 하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인 유한철은 세브란스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하다, 해방 후에는 극작가와 평론인, 체육인으로도 활동 반경을 넓혔다. 1968년에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이러한 약력 중 의사와 체육인으로서의 이력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근대 전후로 한국에서 인구 담론을 통해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식인 사이에서 주목을 끌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유한철 역시 의사와 체육인으로서의 이력이 가족계획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¹¹²⁾

다음으로, 필진은 크게 외부 필진과 내부 필진으로 구성된다. 각 필진은 기고하는 글의 주제에 따라 다시 분화된다. 외부 필진은 전문가(외부-전문가)와 독자(외부-독자)로 나뉜다. ‘외부-전문가’는 가족계획, 성교육, 의료지식, 가정관리학, 육아·법률 상담, 새마을운동, 농촌 지도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고하고 있다.¹¹³⁾ 권호의 특집 기사는 일반적으로 내부 필진이 직접 작성하는데, 그 주제에 따라 문화공보부, 보사부 가족계획담당관, 가정법원 조정위원, 여성문제 연

112) 이임하 외, 『근대적 일상과 여가의 탄생』, 지식의 날개(2018)

113) 대표적인 기사 제목들을 나열해보자면, 「모월의 반찬거리」, 「위인의 어머니」, 「슬기로운 어머니」, 「마을병원」, 「육아상담」, 「이상적인 피임방법을 안내하는 연속강좌」, 「농가부업」 등이 있다.

구소장 등의 인사들이 외부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¹¹⁴⁾ 특집 기사를 제외한 의료·육아·법률·가정관리와 관련된 주제에는 매호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글을 실고 있다.¹¹⁵⁾ ‘외부-독자’는 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들이 가족계획 참여 수기, 정관수술 참여 후기, 일상적인 가정 수필로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 독자들의 수기가 ‘외부-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족계획 어머니회 회원과 지도요원들이 「가족계획 우체통」에 각 지역 어머니회의 소식 및 요청사항, 활동 후기 등을 실는 경우도 있다. 내부 필진은 『가정의 벗』 본지의 취재기자진과 가족계획협회 인사로 분류된다. ‘내부-기자’와 ‘내부-인사’는 공통적으로 가족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실었다. 가족계획 실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마을을 취재하는 「모범(본보기) 어머니회」¹¹⁶⁾, 해외의 가족계획 사례를 소개하는 「세계의 가족계획 뒷골목」¹¹⁷⁾, 가족계획협

114) 1972년 8월호는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오늘과 내일”을 특집으로 정하고, 장경식(보건사회부 가족계획 담당 보좌관)의 글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과 그 전망」을 게재하였다. 1972년 10월호는 특집 기사로 “남존여비사상을 버리자”는 주제를 내걸었다. 김용한(건국대학교수, 가정법원 조정위원)씨가 「법률상으로 본 딸과 아들의 차이」를, 배경숙(건국대 법정대교수)씨가 「여성의 권리를 찾는 법률지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1972년 12월호의 특집 기사는 “10월 유신과 새마을 사업”이었다. 이기준(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씨는 「협동과 자조는 새마을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새마을 운동은 이 나라에서 가난을 추방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국민혁명’의 운동이다.”라며 국민정신의 계발과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증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병집(중앙대학교 농대학장)씨는 「오늘의 노력이 자손만대 번영」이라는 제목을 달고, “오늘날 농촌개발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농민들 스스로의 협동적인 노력이 구축되고 외부적 지원은 이러한 농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라며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농민이 자활하고자 해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115) 이종진(대한가족계획협회 이사장)의 「마을병원」, 전찬화(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의 「육아상담」, 고병국(변호사)의 「법률상담」, 이선필(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의 「농가부업」이 해당된다. 단, 이종진은 외부 필진-전문가이면서 내부 필진-가협인사라는 두 가지 분류에 모두 속한다.

116)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담양읍에서 광주행 국도를 따라 9km쯤 가면 바른편에 112호의 농가로 구성된 원강리는 얼핏 보아도 가난의 때를 벗은 부유한 마을이라는 인상을 풍겨 준다. (중략) 당초 회원 11명이 모여 매월 30일마다 월례회를 베풀고 월간 『가정의 벗』을 교재로 서로 돌려보는 가 하면, 회의비를 적립하여 어찌다가 웅색한 회원이 생기면 이 적립금 중에서 융자해 쓰는 등 딱한 경우를 모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주춧돌격인 어머니들 스스로가 자기 부락 개발을 위해 선두에 서기도 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꽃망울처럼 부푼 ‘꽃마을 가꾸기’ 운동」 『가정의 벗』 제4권 2호(1971년 2~3월호). p.22

117) 김영목. “최근 미국의 심장부 뉴욕시에서는 몇가지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살기 좋은 뉴욕 운동’이라고 할까요? 여하간 미국 뉴욕에도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뉴욕시 ‘뱅크-베츨’구 협회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 하나만 낳자’는 ‘하나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중략) 또 한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를 소개하죠. 같은 뉴

회 및 인구 정책 관련 중요 사항을 전달하는 「협회 안팎 소식」¹¹⁸⁾, 원활한 가족계획을 운영되기에 앞서 마을의 환경 및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연재하는 「어머니금고 운영의 실제」¹¹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외부 필진과 내부 필진은 기고하는 글의 주제에 따라 분류되는데, 약 40페이지 가량의 본문에서 각 필진이 기고한 글의 비중은 외부가 70%, 내부가 30% 정도로, 본 잡지가 외부 필진의 글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외부 필진일지라도 가족계획협회 및 가족계획 자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외부’ 필진은 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편집진들이 홍보와 선전에 적합한 매체적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다면, 필진은 가족계획 실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목적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관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언론·출판 관계자 중에는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사 필진과 방송국 편성국장도 포함되었다. 가족계획협회는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방영되는 극의 내용과 방영일자, 출연진 등 상세한 정보를 『가정의 벗』에도 기재하여, 이중 홍보 효과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⁰⁾ 동아일보 필진의 참여는 대한아이스협회 명예회장인 유한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동아일보가 창간된 초기에 필진 중 한 명이었던 변봉현은 평파(平波)라는 필명으로 사흘동안 조선체육회의 창립 당위

혹시 ‘제인st 블록협회’에서는 젊은이나 중년층이나 ‘남성불임술’ 조합을 만들어 가장 이상적이고 안심 이 되는 피임조합을 알뜰히 꾸며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세계의 가족계획 뒷 골목: 하나만 낳자는 뉴욕식 새마을운동 크게 번져」 『가정의 벗』 제5권 9호(1972년 9월호). p.26

118) 협회 사무실 이전, 협회 요원 동정, 어머니회 자원지도자 교육 계획, 가족계획 표어 및 글 짓기 대회·가족계획협회 임시 총회 및 학술대회, 국제가족계획연맹 지역 회의 안내 등의 짧은 내용의 소식들을 알리고 있다.

119) 통장 정리, 회원 카드 정리방법(대부금란 기입), 현금 지출전표 기입, 전표집계표 작성, 총계정원장 기재방법 등 회계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120) ‘둘낳기 운동’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가족계획실천의 생활화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담은 일일연속극 「사랑의 자매」가 매일 오후 7시 40분부터 8시까지 라디오 극장 시간에 방송되었다.

성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다.¹²¹⁾ 이후 체육 활동 및 기관 증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었고,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창립하게 된다. 동아일보는 조선체육회의 발기 총회에도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¹²²⁾ 이 같은 맥락에서 동아일보의 필진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표6】 가정의 벗 필진 구분

	외부 필진		내부 필진	
	전문가	독자	본지 기자	가협 인사
기고글의 주제	가족계획, 성교육, 의료지식, 가정관리, 육아상담, 법률상담, 새마을운동, 농촌 지도	참여수기, 가정수필, 어머니회 소식	가족계획, 피임, 협회 소식	가족계획, 수필, 어머니회 운영관리
필진의 직업	의사, 법조인, 교수, 연구소장, 행정관료, 학교장	주부, 학생, 직장인, 가족계획 어머니회, 가족계획 지도요원		협회이사, 연구위원

- * 외부 필진에는 만화 및 소설을 연재하는 작가진도 포함되었지만, 전체 필진의 비중을 고려해 본 표에서는 생략함
- ** 가협 인사에는 가족계획어머니회, 가족계획 지도요원들을 제외하고, 가족계획협회 내에서 직함이 있거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
- *** 어머니 및 지도요원은 『가정의 벗』의 생산자보다는 수용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독자로 구분함

121) “각성하라. 운동에 대하여 크게 각성하라. 열(熱)과 역(力)을 내이라. 운동에 대하여 큰 열과 큰 역을 쓰라. 과거에는 우리가 비록 운동에 대하여 냉정하였을지나 또 아모 관념을 두지 않았을지나 신시대와 신세계의 급일에 지하여서는 운동에 대하여 크게 열렬하여지고 만히 연구도 하며 노력도 하며 장려도 하여 온조선에 운동열을 크게 니리키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90년사』 (2010). 44~56쪽.

122) 동아일보사. 2013. 『한국육상경기 100년사』. 80~86쪽.; 손환. 「일제강점기 조선체육 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표지면은 여성 단독 사진이거나 여성과 아이들의 동반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¹²³⁾ 여성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여성은 배제되고, 가임기 연령(18~45)에 해당하는 여성 혹은 당대의 유명 여성 배우들이 표지에 등장한다. 아이와 동반한 사진의 경우, 3명 이상의 아이가 함께 나온 사진은 드물고, 1명 내지 2명의 아이가 주로 등장한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 서서 가족의 모습이 연출된 사진이 표지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가족계획협회가 구상하는 가족의 이미지가 표지를 통해 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이미지에 자녀의 성별은 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남아선호로 인한 다산이 가족계획사업에 있어 장애요인이었지만, 자녀의 수만 조절할 수 있다면, 자녀가 전부 남아인 경우도 가족의 이미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가족계획 구호로도 입증된다. 1966년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는 3·3·35운동, 1971년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둘낳기 운동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70년대 초까지도 가족의 이미지가 표상하는 자녀는 성별이 아닌 숫자로 대변되었고, 표지 역시 그러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남아선호를 드러냄으로써 모순점을 낳기도 했다. 이는 1972년 9월호 「가족계획우체통」에 실린 한 독자의 발언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표지 사진이 거의 남자 아이들뿐입니다. 딸 둘을 낳고 단산한 제 경우 괜히 시샘이 나서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딸이 아들보다 낫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인데 하필이면 『가정의 벗』에 꼭 아들만 낄게 뭘까요.”라며 표지에 딸의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남겼다.¹²⁴⁾

123) 창간호는 그림 일러스트 형식의 표지였다. 다만 1969년 1월 ~ 1970년대에는 주로 사진 이미지의 형식의 표지가 주를 이뤘고, 80년대에는 그림 일러스트의 표지가 많아졌다.

124) 이향지(서울 성북구 수유2동 240-55). 「가족계획우체통: 표지에 귀여운 딸들 얼굴 실어주세요」 『가정의 벗』 제5권 9호(1972년 9월호). 7쪽.

【사진 1】 『가정의 빛』 표지



광고면은 매 호마다 본문의 앞과 뒤, 표지의 뒷면에 약제, 식음료, 가족계획과 관련된 광고를 2~3면에 걸쳐 반복적으로 싣고 있다. 약제는 전체 광고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제품군이다. 세부 제품은 종합영양제, 감기약과 같은 일반약, 홍역과 결핵용 만성·전염병약, 구충제, 피임약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게재되는 것이 피임약이다. “오이기논”, “오소노봄”의 섭취형 피임약, “루우프”와 “콘돔”과 같은 착용형, 주사형인 “데포-프로베라150”으로 다양한 피임약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오이기논”¹²⁵⁾과 “루우프”는 약제 광고와 별도로 보건사회부에서 게재하는 가족계획 관련 광고면에서 피임법으로 다시 소개될 정도로 큰 지분을 차지해, 가족계획의 목적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광고가 아닌 일종의 기사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핵약 “나이드라

125) “오이기논”은 SIDA의 지원을 받아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루우프 피임법이 맞지 않는 부인들에게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한달 분을 수수료 30원에 제공하였다. 이 내용은 거의 매 호의 광고면에 실릴 정도로, 타 약제와 제품군에 비해 노출 빈도가 높았다.

깃드”, 홍역예방약 및 회충약인 “웰코박스·알코파”, 종합영양제 “비타민” 등과 같은 약제 광고가 있다. 가정의 식단을 책임지는 주부들이 눈여겨볼 수 있도록 “미원”, “칠성사이다”와 같은 식·음료 광고도 종종 실렸다. 보건사회부와 가족계획협회에서 가족계획을 홍보하는 차원의 계몽 광고들 역시 약제 광고 다음으로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광고들은 잡지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홍보 효과를 겸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약제와 가족계획 광고의 높은 노출 빈도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과 각종 만성병 방지를 통한 공공의료망 구축 등 가족계획협회가 초점을 두고 있는 영역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표7】 가정의 벗 권호별 광고 성격 분류

종류	세부 구분	내용		공급 주체
약제(13)	일반약(2)	비타민(종합영양제), 몰트 헤모그로빈(영양제) 푸로엑티닐(감기, 항히스타민제)		기업 *대부분은 해외 약제로 국내 제약사가 수입판매를 도맡음
	만성·전염병약(2)	나이드라깃드(결핵), 웰코박스(홍역)		
	구충제(1)	알코파(회충)		
	피임약(8)	섭취형	오이기논, 오소노분, 린디올, 오부라 0.25, 이나보라	
		착용형	콘돔, 루우프	
		주사형	데포-프로베라150	
식음료(2)	조미료(1)	미원		기업
	음료(1)	칠성사이다		기업

가족계획(3)	가족계획(3)	돌날기운동, 가족계획 상담, 피임법	보건사회부, 가족계획협회
---------	---------	---------------------	---------------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제품의 수

표지면-광고면에 이어 마지막으로 기사면이 있다. 기사면의 처음은 해당 호에서 선정한 농촌 지역의 특색 사업과 가족계획 어머니회의 활동상이 담긴 사진을 한데 실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부락의 생활환경 개선 및 가족계획사업의 모범 운영 사례를 함께 언급해 가족계획 어머니회의 활동 및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뒤쪽에 「본보기 어머니회」라는 고정 기사를 게재하는데, 앞 편에 실은 사진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2】 본보기 어머니회 취재 기사 사진(126)



전반적인 본문의 서술 논조는 “가족계획”과 “생활개선”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계획”은 다시 세부적으로 피임법, 자녀양육,

126) (사진·왼쪽) “어머니회를 재정비한 6개월만에 「영양개선의 집」을 마련하게 된 회원들, 그러나 회원 손수 벽돌을 짚어, 토수, 목수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진·오른쪽) “대구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가족계획 시술용차가 명곡 2동에 왔다. 계몽용 리플렛(리플렛)을 받아들이고 시술을 받기 위해 차를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 대한가족계획협회. 『본보기 가족계획 어머니회』 『가정의 벗』 제5권 9호(1972년 9월호). 5~6쪽.

임신과 출산의 과정 등으로 나뉘어진다. “생활개선”은 농촌 진흥, 생활 상식, 가정·자산 관리로 구분되고, 그 외에 협회 소식, 독자 페이지, 문예 및 오락 기사들이 있다. 주제에 따라 크게 구분하였지만 매 호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며 가족계획과 생활개선에 구분되지 않고 연계되는 경우도 많다.

【표8】 가정의 벗 주제별 분류

가족계획	피임·출산·양육	육아상담, 엄마가 알아야 할 어린이의 성교육
	가족계획	본보기 어머니회 취재, 가정수필, 가족계획 실천수기, 세계의 가족계획 뒷골목, 부부수필, 가족계획우체통
생활개선	농촌 진흥	농가부업
	생활(시사)상식	나의 건강 비결, 마을병원, 법률상담
	가정·자산 관리	가정관리학, 어머니 금고 운영방법, 반찬거리
기타	생활의 지혜, 협회 말씀	안팎소식, 웃음주머니, 위인의 어머니, 알리는

* 1969~72년 사이의 『가정의 벗』 기사 중 반복되는 내용으로 선별하였다.

“가족계획”은 『가정의 벗』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인 만큼, 매 호의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족계획”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가족계획”과 다양한 논점과 연결지어 그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들 역시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현실을 환기하는 기사가 있다. “우리 가정을 옛날처럼 부유하고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면을 고쳐나가자고 남편에게 상의했다. (중략) 그 다음으로 나는 피임을 할 생각으로 남편과 논의했다 … 내가 루우프를 넣었다는 사실을 듣고 동네에서는 ‘겨우 애가 들인데 못 낳게 하다니 별난 여자’라고 흉을 보았

다.”¹²⁷⁾처럼 가족계획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할 필요를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계획을 통한 가정의 안정화라는 이점을 강조하는 기사가 있다. “아이들의 수가 적으니 오붓하고 간단해서 좋다. 첫째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그들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어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 교육상으로도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외출이나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큰 아인 아빠 손에, 작은 아인 엄마 손에, 하나씩 분담하니 즐겁고도 간단한 행장이 아닌가.”¹²⁸⁾ 가족계획을 통해 적절한 수의 자녀를 유지하는 것은 가정의 정서적 여유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의 건전을 도모할 수 있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안정화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세 번째로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가족계획이라는 논점을 부각한 기사가 있다. “우리 지역의 어머니회는 비단 가족계획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개발, 잘 살기 운동, 신생활 운동의 선구자들이자 지도자가 되고 있지요.”¹²⁹⁾라는 취재 기사는 가족계획사업과 새마을운동이 협응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실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회장인 류달영은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는 글들을 종종 실었다. 농촌생활개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전신인 재건국민운동본부장직을 맡아 1961년부터 농촌부흥 및 유기농업 연구 등의 일에 몰두한 그의 이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는 「생활의 지혜」에서 “새마을운동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어서, 마을마다 농로확장, 지붕 바뀌이기, 우물수리, 빨래터 설치,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회관 짓기, 노인들 모임터 건설 등등 농한기에 모두 바쁘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략) 새마을운동은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또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

127) 김영애. 「농촌 주부의 글」 『가정의 벗』 제2권 5호(1969년 5월호). 26쪽.

128)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 에세이: 작은 성(成)의 왕자들」 『가정의 벗』 제5권 8호(1972년 8월호). 24쪽.

129) 대한가족계획협회. 「본보기 어머니회: 신생활운동에 앞장선 교아의 어머니(전북 부안군 어머니회)」 『가정의 벗』 제4권 1호(1971년 1월호). 13쪽.

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 가족계획사업의 성공 없는 운동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¹³⁰⁾ 이는 새마을운동과 가족계획사업 모두 개인, 가정, 마을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가족계획사업의 선행 없이는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두 사업 간의 연계적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가족계획”과 국가 발전 전략을 연결지은 기사이다. “여유 있는 가정 경제가 곧 전체적인 국가경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둘둘이 운동이 얼마나 애국적인 운동인지 금방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¹³¹⁾ 이 기사는 ‘가정=국가’는 ‘가족계획=애국’이라는 도식을 성립시킴으로써, 가족계획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가족계획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관 절제수술을 받은 사람이 19명이고, 피임약 복용자가 18명, 루우프가 11명, 콘돔이 14명으로 도합 62명입니다. (중략) 앞으로 우리 어머니회의 설계는 본격적인 장학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작년에 4만 7천원을 들여 세 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는데, 공부를 썩 잘해요. 그런 아이들을 계속 뒷받침하는 게, 마을을 위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하는 일일 것 같아요.”¹³²⁾ 이 기사는 가족계획은 한 가정을 개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을과 국가의 미래를 가꾸는 것임을 드러낸다.

가족계획협회는 초국가성과 공공성(보건의료)를 바탕으로 설립되었고, 그 활동 이력을 통해 발전주의와 조용하는 공적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족을 만들어 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벗』은 가족계획협회의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되 보다 구체화된 초점으로 농촌 가정(여성)의 근대화를

130) 대한가족계획협회. 「생활의 지혜: 새마을운동 큰줄거리」 『가정의 벗』 제5권 7호(1972년 7월호). 3쪽

131) 대한가족계획협회. 「특집: 둘둘이 운동을 벌입니다」 『가정의 벗』 제4권 5호(1971년 5월호). 15쪽.

132) 대한가족계획협회. 「모범어머니회 취재: 가장 못사는 마을을 가장 잘사는 마을로 바꾼 억척스런 여인들(전남 광양군 골약면 금곡리)」 『가정의 벗』 제5권 7호(1972년 7월호). 25쪽.

표방하고자 했다. 초국가성 및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은 덜어내고, ‘가족계획’과 ‘생활개선’을 직접적으로 녹여냈다.¹³³⁾ 이는 기사면에서 제시한 논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각 논점들은 현실을 환기함으로써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가정의 안정화라는 이점,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마을·사회 발전 도모, 그리고 국가 발전 전략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점층적으로 가정에서 국가의 발전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가정과 국가 양자의 상호 발전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자아내는 가족계획의 이상은 『가정의 벗』을 통해 강화 및 확산되고 있었다. 『가정의 벗』은 기관지로서 기관과 기관이 대변하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으로써 발전주의와 영합한 가족의 상을 보여준다.¹³⁴⁾ 일반적인 기사 외의 권호의 특집기사에도 가족의 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³⁵⁾ “선진국의 정책인 ‘둘둘이 운동(아들 딸 가림없이 둘의 어린이를 두 살 터울로 삼십세 이전에 낳자는 것)’은 장남의 비애 따위의 부분적인 이유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현대에 알맞은 가족구성이 아닐 수 없다”¹³⁶⁾

133) 『가정의 벗』은 가족계획과 국가발전에 비해 초국가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정의 벗』의 출간이 국제적인 인구 담론과 지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물적인 차원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SIDA의 지원과 광고면에 드러난 각종 약제 광고에서 잘 드러난다.

134)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촌사람들이 아기 낳기를 조절하여 식구를 줄일 수 있다면 보리고개를 넘기는 농민들은 물론 농업발전에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도 훨씬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성두(조선일보 논설위원). 「농촌의 가난과 보릿고개」 『가정의 벗』 1969년 3월호.; “나의 가정이 잘 살게 되면 우리 마을은 물론 우리 나라의 농촌과 국가가 부흥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애(경북 선산군 고아면 외우동 50대 주부). 「농촌 부부의 글」 『가정의 벗』 1969년 5월호.; “아무리 세대가 어지럽드라도 어머니는 항상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성곽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농촌 더 나아가서는 잘 살려고 애쓰는 나라의 노력에 협력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즐거운 우리 집」 『가정의 벗』 1969년 7월호.

135) “사람은 제 각각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략) 가정에서나 마을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일상적인 소재의 수필에서도 국가와 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해, 국가의 역군을 길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생활의 지혜: 분수를 아는 지혜」 『가정의 벗 = Happy home』 제5권 8호(1972년 8월호). 3쪽.

136) 대한가족계획협회. 「특집: 둘둘이 운동을 벌입니다」 『가정의 벗』 제4권 5호(1971년 5월호). 16쪽.

이러한 서술에서 인구는 통치의 목적이자 수단이며, 가족은 인구의 수단이다. 따라서 가족계획협회는 『가정의 벗』을 통해 당대의 농촌 가정(여성)에 정상적인 가족의 상을 주입하는 식으로 국가 권력의 작용을 미시화하고, 가족계획 및 정상 가족의 상을 정당화해나갔다.

V. 결론

『가정의 빛』 1969년 1월호 단편 만화란에는 가족계획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 “결혼하면 가족계획 생활을 하겠는고?” / “예. 네” / “좋아! 결혼을 선언하노라!!”¹³⁷⁾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부부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는 문제인, 가족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을지, 아니면 낳지 않을지, 낳는다면 얼마나 낳을지, 또 언제 낳는게 좋을지, 자녀의 터울은 어느 정도로 둘지에 대한 것부터 아예 결혼을 하나 마느냐에 이르기까지 가족계획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이 논문은 시대의 화두인 가족계획에 착목해 한국의 정상 가족 원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떠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정상 가족이 의미하는 바를 찾기 위해 인구 담론이라는 지식의 총체로 역류했다. 산업혁명을 분기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인구’라는 인식의 틀이 등장했다. 이 틀은 개인과 집단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집단의 편향성을 분석함으로써 규범과 제도, 사회상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동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유럽 등지로 확산되며, 담론화되었다. 각 국가는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인구 담론을 변용했다. 19세기까지의 인구 담론은 이처럼 일국사적인 양태에서 인구 담론을 형성해나간 반면, 20세기 무렵의 국가들은 전지구적인 범주에서 인구 담론을 세계 체제화하였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된 인구 담론이 제3세계의 인구 동향에 관한 안보 문제로 비화되었고, 국가의 근대화가 새로운 관념과 제도의 발명을 통해 식민지에 이식되었다.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진보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기준 밖의 사람을 국민에서 배제하기 위해 인종생물학적 조치가 취해졌다.

137)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정의 빛』 제2권1호(1969년 1월호). 25쪽.

인구 담론이 보편화됨에 따라 한국도 인구라는 새로운 틀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국의 혼란, 구습의 잔존, 열악한 성인지 수준 등에 의해 인구(당시에는 산아제한 문제로 통용)에 대해 합일된 상을 만들려던 노력은 좌절되고, 과편화된 시각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 담론이 그 효용을 인정받고 정책의 측면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등장은 한국에서 인구 담론이 인구 정책으로, 인구 정책이 가족계획의 영역으로 구체화되었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가족계획협회는 가족계획의 실행을 위해 의료·행정·사회 계열의 전문가를 한데 모아, 한국에 가족계획이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다. 조사연구, 정책자문, 교육홍보 등 다방면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가정의 벗』은 교육홍보면에서 가족계획협회의 대중화 전략을 대표하는 작업 중 하나로, 협회의 이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그 이상을 전달하는 전파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족계획협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은 ‘가족계획’은 국가의 발전주의와 조응해 자활·자립·자생·자육할 수 있는 양질의, 적합한 수의 인간을 길러내고, 그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의 환경인 가족을 구성해내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이를 통해 구현되는 가족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가족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기 전에는 유교적 정서에 기반한 남성 가정이 이끄는 일가 친척과 문중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집합을 가족이라고 이해했다. 한 집에 살면서 매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따지는 식구(食口)를 일반적인 가족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인구가 여러 사유체계와 결합하며 국가 통치성의 범주로 활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역시 “가족을 계획”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사유체계에 편입되면서 발전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호

름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이상적인 가족의 상은 남녀 부부와 자녀를 포함한 근대적 핵가족 형태, 국가가 목표하는 발전상에 적합하다고 규정한 정상성을 획득한 공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찰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가진다. 먼저 자료의 한계이다. 본문에서 연구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다룬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는 언어적 한계로 인해 피상적인 면에 그쳐 구체적인 실증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족의 의미를 가족계획협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분석해, 정부와 일반 대중의 다양한 반응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가정의 벗』이 “가족계획”이라는 당위를 수용자들에게 납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한국의 인구 위기는 가족계획사업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전체의 성과로, 『가정의 벗』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실증의 영역에서 어떠한 했을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관지로서의 『가정의 벗』은 가족계획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견해 역시 이미 가족계획을 인지하고 실천한 경우로 한정된다. 결국 『가정의 벗』이 “가족계획”의 대중화 작업을 통해 일반 가정의 근대화를 이뤄냈는지는 가족계획사업의 전체 성공 여부로 일부나마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을 통해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어떠한 역사적 층위를 거쳐왔고,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정상 가족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답이 되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1. 미국 문서

- 1) 록펠러 아카이브 센터(Rockefeller Archive Center) 문서
“Asian Era Campaign - Korean Support”, Asia Society records(FA110), Box 834, Folder 8039.
“Correspondence, Reports, Studies: Workshop on Family Planning Evaluation, January 26-February 20, 1970”,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4, Folder 1004.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Conference, Seoul, May 26-29, 1965”,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5, Folder 1014.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6, Folder 1021.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Equipment”,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6, Folder 1023.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Urban Project Reports”,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8, Folder 1035.
“Pathfinder Fund”, Population Council records, Accession 1, RG 1(FA210), Box 106, Folder 1985.
“Pathfinder Fund”, Population Council records, Accession 1, RG 1(FA210), Box 107, Folder 1987.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AID Contributions”,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08, Folder 1034.

“The 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 Population Council records, Accession 1, RG 1(FA210), Box 98, Folder 1812.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r. Jae Mo Yang: Koyang Family Planning Study”, Population Council records, Central Files, Accession 2, RG 2, Series 1 to Series 4(FA432), Box 110, Folder 1056.

2) 프러스(FRUS) 문서

FRUS, 1961-1963. Volum XXII, Northeast Asia.

_____, 1950. Volum VII.

2. 한국 문서

모자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6713호, 1973.5.28.]

모자보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20호, 1973.8.13.]

보건사회부직제 [시행 1963.12.17.] [각령 제1715호, 1963.12.16., 전부개정]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가정의 벗=Happy home』, 1969~1975

『삼천리』 제5권 4호, 1933.4

『별건곤』 제26호, 1930.2.

『별건곤』 제40호, 1931.5.

『새가정』 제1권, 1954.1

❖ 2차 자료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보(창간호)』, 1970.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63년사: 1958-2021』, 2021.
- 국사편찬위원회, 『진정한 농민의 협동조합을 위하여: 1950년대 이후 이천지역 농민조합 운동/가족계획에 헌신하다: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협회 계몽원의 활동』, 구술사료선집2, 2005.
- _____, 『산과에서 조산사로, 한국 출산 문화의 변화』, 구술사료선집24, 2017.
- _____, 『출산과 여성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 구술사료선집25, 2018.
-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가족계획협회20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1983.
- _____, 『가협30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1991.
- _____, 『사랑의 성교육=Sex education in love』,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 대한어머니회, 『바람직한 한국 어머니상: 대한어머니회 창립 25주년 <기념문집>』, 서울: 대한어머니회, 1983.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90년사』, 2010.
- 동아일보사, 『한국육상경기 100년사』, 2013.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중점연구11: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 2021.
- 손욱 외 4인,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5.
-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진으로 보는 50년』,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사』,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2021.
- 인구학회, 『인구대사전』, 통계청, 2016.
- 주양자 외 4인, 『우리나라 근·현대여성사에서 여의사의 활동과 사회적 위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 카바40년사 편찬위원회,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서울: 홍익재, 1995.
-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식민주의와 가족·법·젠더』,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2012.

❖ 단행본

- Paul R. Ehrlich, *The Population Bomb*, New York(State): Buccaneer Books, 1995.
- Marie Carmichael Stopes, *Married Love: A new Contribution to the Solution of Sex Difficulties*, The Critic and Guide company 12 MT. MORRIES PARK WEST NEW YORK, 2018.
- Matthew James Connelly, *Fatal Misconception: The Struggle to Control World Popul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Joshua Cole, *The Power of Large Numbers: Population, Politics, and Gender in Nineteenth-Century Fr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 John Berry Haycraft, *Darwinism and Race Progress*, SWAN SONNENSCHNEIN&CO.,LTD, 1990.
- Westad Odd Arne,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가토 슈이치, 『연애결혼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성도덕과 우생사상의 100년간』, 소화, 2011.
- 권오영 외 7인, 『도시를 보호하라:위생과 방역으로 세워진 근대 도시 이야기』, 역사비평사, 2021.
- 넨시 톰스,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푸른역사, 2019.
-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 마시모 리비-바치, 『세계인구의 역사』, 도서출판 해남, 2009.
- 마이클 레이섬,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그린비, 2021.
- 미셸 푸코, 『안진, 영토, 인구』, 난장, 2011.
- _____, 『성(性)의 역사』, 난장, 2012.
- _____,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 앤 커 외, 『장애와 유전자 정치』, 그린비, 2021.
- 이언 해킹,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2016.
- 이임하, 『근대적 일상과 여가의 탄생』, 지식의 날개, 2018.

- _____,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 철수와영희, 2020.
-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 폴 몰런드, 『인구의 힘: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가』, 미래의 창, 2020.
- 프랭크 스노든, 『감염병과 사회』, 문학사상, 2020
- 최규진, 『이 약 한번 잡쉬 봐!: 식민 약 광고와 신체정치』, 서해문집, 2021.
- _____, 『한국 보건의료운동의 궤적과 사회의학연구회』, 한울아카데미, 2016.
- 하워드 웨이츠킨, 『제국과 건강: 보건의료의 정치경제와 사회의학의 미래』, 나뭇박스, 2019.
-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몸과 생명정치로 본 서양사』, 푸른역사, 2011.

❖ 논문

- Matthew James Connelly, "Population Control in History: New Perspective on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Limit Population Growth,"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5(1), 2003.
- John P. DiMoia, "(Let's Have the Proper Number of Children and Raise Them Well!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Family Planning and Nation-Building in South Korea, 1971-1968,"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20.
- 김대현, 「일본의 우생학에서 미국의 우생학으로: 해방 이후~1950년대 한국의 소년범죄 담론」, 『역사문제연구』 49호, 2022.
- 김수자, 「'가족계획' 담론과 여성 '몸'에 대한 인식 변화:1950~60년대 「여원」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9집, 2018.
-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 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구술생애사 분석」, 『가족과 문화』 25집 2호, 2013.
- 김영미,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뮌헨 부부의 인구정

- 책 구상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9호, 2021.
- 김인수, 「출산력조사를 통해 본 일본의 인구정치, 1940~50년대」, 『사회와 역사』, 제118집, 2018.
- 김호연, 「우생학, 국가, 그리고 생명정치의 여러 형태들, 1865-1948」, 『동국사학』 66집, 2019.
- 김홍주,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권, 2002.
- 박승만, 「복강경의 기술사: 1970-80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광명, 「5·16 군사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입안 배경과 논리」, 『동국사학』 62집, 2017.
- 박정심, 「근대적 몸(신체)의 발견: 수신에서 체육으로」, 『한국철학논집』 제36집, 2013.
- 손환, 「일제강점기 조선체육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0권 6호, 2011.
- 안은희, 「푸코의 사유에서 주체화(subjectication)의 의미: 들뢰즈의 푸코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학술』 제10호, 2023.
- 오경환, 「모아진 몸-프랑스 제3공화국 인구감소 논쟁으로 본 푸코의 개인, 인구, 통치성」, 『서양사론』 제103호, 2009.
- _____, 「발전 경제학의 대안적 경로-군나르 뮈르달의 경제학적 사유의 특징과 한계」, 『사총』 99권, 2020.
- 윤정란, 「국가·여성·종교: 1960-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 여성」, 『여성과 역사』 8권, 2008.
- 이동원,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동국사학』 69집, 2020.
- 이명선,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간: B. 가족계획에 대하여」, 『여성학논집』 7집, 1990.
- 이정선, 「가족사, 가장 오래된 새로운 역사: 한국 근현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비평사』 104호, 2013.
- 이종찬, 「19세기 독일사회의학의 역사적 발전: 예방의학의 역사적 복원을 위한 하나의 시론」, 『의사학』 제3권 1호, 1994.

- 이꽃메, 「한국 지역사회간호의 선구자 이금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3.
- 조운주, 「가족계획 담론의 잡지 『가정의 벗』 연구:60, 70년대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8집(12권 1호), 2008.
- 조은주, 「인구의 출현과 사회적인 것의 구성」, 『경제와 사회』 105호, 2015.
- _____, 「인구의 자연성과 통치테크놀로지: ‘가족계획어머니회’를 둘러싼 통치-과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124호, 2014.
- 최원규, 「하상락의 사회사업 교육관」, 『사회복지역사연구』 제2권, 2019.

❖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 국립중앙의료원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회전자도서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 대한의학회
- 법원도서관
- 외교부 OPEN DATA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70년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 통계청
- 통계청 지표누리
- 한국물가정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디지털 역사관
한국잡지박물관 소장자료 DB
한국학중앙연구원
E-법원역사관
ACE-ED Maps
Center for the History of Medicines at Countway Library
Online Etymology Dictionary
GBLPNA(경북도간호조무사회)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IH)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Riksförbundet för sexuell upplysning(RFSU, 스웨덴 전국성교육협회)
Rockefeller Archive Center
Statista
Statistikmyndigheten(스웨덴 통계청)
Store Norske Leksikon(노르웨이 백과사전)
The Swedish Development Forum(FUF)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istory-EngenderHealth
Women's History Network

ABSTRACT

“Would you do family planning?”

- Population discourse and family planning projects in Korea, 1953-1972 -

Minyeong Hwang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trace the historical genealogy of population discourse,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population discourse in Korea into family discourse, and define the “family” model,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family planning project in Korea during the 1950s and 1970s.

The concept of population emerged in response to urban problems caused by the 18th-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The new grid of perception of population reshaped society, with a hierarchical structure placing the country as the upper unit and assumptions as the lower unit within a network-like framework. England, France, and Germany extensively documented the societal changes resulting from population discourse. Studies such as eugenics, statistics, and medicine became commonplace, with eugenics, in particular,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the genealogy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cluding periods of war and the Cold War. The initial framework expanded globally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weden.

Over time, the abstract concept of population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body of population knowledge, known as population discourse, spanning the 18th to the 20th centuries. This discourse, in turn, prompted the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ies worldwide. Korea, in sync with the global systemized population policy, underwent a transition to family discourse. A pivotal indicator of this shif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Family Planning Association, a semi-official organization spearheading family planning initiatives. The Family Planning Association comprised three expert groups—doctors, administrative bureaucrats, and social engineer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preemptive family planning for achieving broader goals lik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health system, the organization engaged in activities across three domains: research, policy advice, and educational promotion. These efforts consolidated the diverse images of family into a unified model, now recognized as a universal family prototype—a structure consisting of male and female parents and children.

While appearing as a private community on the surface, this family model was endowed with the attribute of a public community, serving as a means to accomplish national objectives. The popularization of the family model as a public community was achieved through the educational promotion initiatives of the Korean Family Planning Association, notably through its journal, 'Family Friend.' This publication not only depicted the contemporary reality but also encapsulated the prevailing family model of that time. The widespread distribution of this journal to various institutions and ordinary citizens indicates the successful efforts of the Family Planning Association in promoting family models, contributing to the enduring influence of the universal family image in the present day.“

부록

❖ 가족계획협회 창립 인사

성명	출신학교 (졸업년도)	직업	활동 이력	관심 분야
양재모	세브란스의대 (1928) 미시간 보건 대학 원(1954~55)	의사, 대한가족계획협 회 이사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기획위원,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국제가족계획연맹 서 태평양 이사회 의장	- 1951. UNCACK 충북지역 보건담당의사 -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실 - 1961. 가족계획협회 설립	가족계획, 산아제한, 예 방의학, 보건학(보건통 계·보건경제학), 지역 사회의학
구신명		대한조산협회 회장	- 1956~62. 대한조산협회 회장	산아제한, 모자보건
김학묵	미네소타대학 사 회사업전문대학원 (1955~)	사회복지학자, 정무공 무원, 적십자사 사무 총장	- 1940년대 말~. 도보건후생과장, 경기도 사회과장, 사회부 구호과장 - 1960. 보건사회부 차관	사회복지사업

성명	출신학교 (졸업년도)	직업	활동 이력	관심 분야
박재빈	서울의대(1949) U C 버 클 리 (1955~56)	의학자, 공중위생학 박사, 대한산부인과학 회장	- 1950~52. UNCACK 경기도팀 통역 및 서 울팀 직원 - 1960~62. 내무부 경제기획원 통계국 담 당관 - 1960~66. WHO 미주 지역 통계담당 의 무관 - 공중보건원 강사 - 하와이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	인구통계, 인구정책
신한수	경성제국대학 의 학부(1946) 서울대학교 대학 원(1949) 예일대·존스홉킨 스 대학원 수료 (1949~55)	산부인과 의사, 대한 산부인과학회 회장	- 1961~70.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 1963. 국제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지역 의사분과위원장 - 1963. 국제가족계획연맹 중앙의사분과위 원회 위원 - 1963. 대한산부인과학회 자궁암위원회 원장	의료제도 현대화, 산부 인과 병리학, 가족계획
유승헌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의사	- 1955~61. 이화여대 산부인과 조교수	산부인과학
이영춘		의사, 사회사업가, 대 한공중보건협회장, 대 한기생충학회장, 보건 사회부 기생충대책 전 문위원	- 1935. 자혜진료소 설립 - 1948. 농촌위생연구소 설립	농촌보건위생, 농민생 활개선

성명	출신학교 (졸업년도)	직업	활동 이력	관심 분야
이한규		법조인	- 1962. 보법원 행정처 법정과장 - 1967~68. 서울가정법원 민사지법 사무국장 - 1971.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지종상		기업가		사회복지, 봉사
하상락	일본중앙대학 법학부(1939~42) 미네소타대학 사회사업전문대학원(1955~56)	사회사업학과(현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사업가	- 1945~. 미군정 사회부 후생시설국 근무 - 1950~53. UN민사원조사령부 사회과 후생고문 역임 - 1955. 대자애육원 설립 - 1957. 한국사회사업학회 창립 - 1958. 서울아동상담소(현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창립 - 1958.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대학원 출범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권순영		법조인	- 1950년대 말.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책임 - 1958. 서울아동상담소 설립 - 1963. 서울 가정법원 설립 주도	아동문제, 소년범죄 예방
강주심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1939)	산부인과 의사, 대한어머니회 부회장	- 1939. 평양기독병원 산부인과 근무 - 1958. 대한어머니회 발족	가족계획, 산아제한 보급, 모자보건

성명	출신학교 (졸업년도)	직업	활동 이력	관심 분야
김용성		정무공무원	- 1958~59. 보건사회부 보건과장 - 1960. 보건사회부 의정국 의무과장 - 1960. WHO 11차 지역회의 파견 - 1960. WHO 본부 근무	보건정책, 의료사업 관리
노경병	세브란스의대 (1948)	산부인과 의사, 제일병원장, 미즈메디 설립자, 대한병원협회 회장	- 1947. 도서지역주민 순방위문단 문맹계발 담당 - 1963. 제일병원 창립 - 1991. 여성의학 전문병원 미즈메디 설립	병원경영, 부인암 치료
손경준	배화여고(1937) 이화여자전문학교	간호사, 간호학과 교수	- 1940년대~.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 1945~46. 보건간호강습 지도 - 1958. 가정생활연구회 파견	모자보건, 영유아 보건, 보건간호사업
오천혜	북캐롤라이나주립대	선교사, 교수, PC 한국사무소 대표, NCC 애육위원회 상임위원	- 1954~. 가족계획사업 홍보 활동 - 1972. 저서 『인구폭발과 인류의 장래』 발간 - 1970~74. 주한미국인구협회(PC) 대표	가족계획사업, 기독교적 인구조절

성명	출신학교 (졸업년도)	직업	활동 이력	관심 분야
윤석우	세브란스의대 (1948) 미시간 보건대학원 (1956)	의사, 정부공무원, WHO의무관, 대한의사 협회 부회장	- 1948~. 농촌위생연구소 - 1953~59. 보건사회부 방역과장 - 1960~61. 보사부 방역국 보건과장 - 1961. WHO 12차 지역회의 파견 - 1965. WHO 의무관으로 아프리카 파견 - 국립소록도 병원장 근무 - 인구보건연구원 초빙연구원 재직	공중보건, 만성병 및 결핵 관리, 보건행정, 방역
이종진	경성제국대학 의 학부 존스홉킨스 공중 보건학	의사, 보건부 의무과 장, 소아과 전문의사, 『가정의 벗』 필진, 국립중앙의료원장	- 1952~55. 보건부 의무과장 - 1956~57.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 1956. 『전염병예방지침』 발간 - 1958.1~2. 스칸디나비아 3개국 시찰 - 1958~60. 국립중앙의료원 1대 원장 - 1959. 국립의료원 간호학교 신설 - 1960. 북유럽식 의료인 교육시스템 채택	국민보건, 공중보건
정준	평양신학교 한국신학교(1942)	정치인, 보건사회위원 장, MRA(도덕재무장 운동) 한국본부 대표, MRA 이사	- 1937. 무산아동 교육을 위한 금릉원학교 설립 - 1942~. 김포농촌보육소 설립 - ~1960. 보건사회위원장 - 1961~. 경북대 문리과 조교수 - 1960년대~. MRA 한국지부 설립 및 운영	사회운동

성명	출신학교 (졸업년도)	직업	활동 이력	관심 분야
최성율		사회단체 위원, 재건 국민운동본부 재해구 호위원회 사무총장, 사회학과 강사*	- 1957~. 기독교아동복지회총무 - 1961~. 재건국민운동본부 재해구호위원 회 사무국장 - 1963. 사회복지사업 연합회 농업복지위 원장 - 1971~. 헌터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사회복지
윤유선	세 브 란 스 의 대 (1935) 존 스 홉 킨 스 (1945~46)	의사, 정무공무원, 국 립중앙의료원장, 대한 결핵협회 부회장	- 1947~. 국립성병의원 초대원장 - 1950~54. 보사부 만성병과장 - 1955~. 보사부 의정국장 - 중앙보건원 2대 원장 -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 1964~65.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4 대 원장 - 1966~69. 국립의료원 7대 원장	만성병(결핵, 성병), 방 역
황태식	세 브 란 스 의 대 (1939~) 연세대 의대(1961)	산부인과 의사, 교수	- 1962~. 연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재직 - 1981~. 마산고려병원 원장	자궁암 치료

성명	출신학교 (졸업년도)	직업	활동 이력	관심 분야
류달영	수원고등농림학교 (서울대 농대 전 신, 1936) 미네소타 대학원 원예학(1956)	교수, 국토통일원 고 문, 원예학회 회장, 한· 덴마크협회 협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 최용신과 농촌계몽운동 - 1936. 호수돈여고 교사 재직 - 1946~76. 서울대 농과대학 원예학 교수 - 1961. 재건국민운동본부장 - 1964. 재건국민운동이 민간기구로 발족 하며 초대 회장 취임 - 1975. 원예학회 회장, 4H클럽 부총재 - 1978. 한국유기자연농업연구회 창립 - 1982. 덴마크 문화훈장 수여 	농촌계몽운동, 식량자 급, 덴마크 모델

❖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스웨덴의 원조 내역

항목	내역
경구 피임약	1. 3,000,000회 주기의 수량의 Eugynon 혹은 그에 상응하는 약제 - 1,500,000 주기분은 21정의 형태로 배급 - 남은 1,500,000 주기분은 보건사회부와 SIDA의 결정에 따라 각각 21정 혹은 28정의 형태로 배급 예정 2. 요구량 5,720,000 중 잔여분 2,720,000주기 분이 알약 형태로 공급 예정 3. 판매용 알약은 각 보건소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배급 예정 - 약제 관리부의 급료 지급 - 부녀자 지원 - 순회 진료 운영 지원 - 가족계획 활동의 기타 개선
차량	24인승 랜드로버(지프차) 88시리즈 해당 차량 12대는 보건사회부 소속 MCH·가족계획부서의 현장 연구 감독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 가족계획사업을 위임받은 PPFK(한국가족계획협회)에서 사용 예정
랜드로버 여분 부품	이전 계약에 따라 제공된 30대 차량의 각 여분 부품이 영국에서 한국으로 운송 1967년 9월 12일 MCH 국장에게 보한 SIDA의 서한에 의해 한국 당국에 전달된 사업의 일부 각 부품은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선별되었으며, 18개월의 작동기간을 포함
종이	1. 30t 규모의 제지 지원 - 15t은 1969년 7월 초 한국 도착 예정 - 15t은 1970년 7월 초 한국 도착 예정 2. 1968년 7월 6일 보사부 장관과 Dr.Odelberg 간의 과거 협약에 의함 3. 이 제지는 국가가족계획사업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 예정